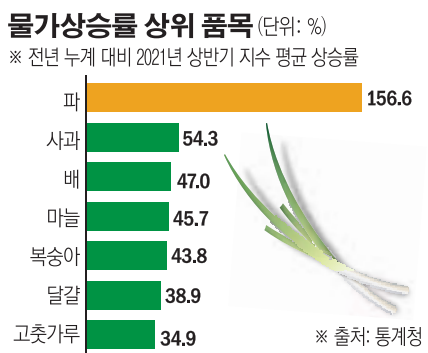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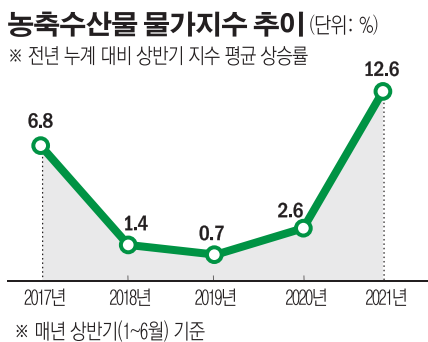


金과·金사과·金달걀 이어
說說 끊는 라면값

‘서민 먹거리’ 줄인상 예고

농축수산물가 상승 30년새 최대
업계, 상반기 원재료값 상승 이유
우유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 검토



먹거리 물가가 상반기에 대폭 오른 데 이어 하반기에도 라면, 우유 등이 가격인상설로 들쭉이면서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작황 부진 등이 겹치면서 농축산물 물가가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6월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6%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5% 이후 10년 만이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30년 전인 1991년 14.8%가 오른 이후 30년 만이다.

품목별로는 올해 초 한파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파가 상반기 156.6% 급등해 1994년 이후 2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가격이 급락한 기저효과도 영향을 끼쳤다. 54.3%가 오른 사과 역시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 외에 배 47.0%, 복숭아 43.8%, 감 22.0% 등 과실류와 마늘 45.7%, 고춧가루 34.9% 등도 가격이 크게 뛰었다.

AI로 산란계가 살처분되면서 달걀 가격도 38.9% 올랐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2억 개의 달걀을 수입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공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작물이 출하되고, 달걀 생산량이 안정을 찾으면 공급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상반기에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
유로 빵, 햄버거, 즉석밥, 두부, 통조림 등
가공식품이 줄줄이 오름 데 이어 하반기에

도 가격 인상 품목이 여전히 대기 중이다. 8월에는 우유 소비자 가격 인상이 전망된다. 우유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8월 1일부터 1당 21원 오르기 때문이다. 원유 값 상승에 따라 우유뿐만 아니라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카페라테 등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가격이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라면도 올 하반기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재료인 밀 등의 가격이 올라 가격 인상 압박 요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2월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 따르면 소맥의 부셸당(27.2kg) 가격은 6.53달러로 1년 새 33.2% 올랐다.

라면은 '저민 먹거리'의 대표상품이다 보니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이 크고, 정부도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민감하게 관리한다. 앞서 오투기는 올해 설 직전 라면 가격 인상을 시도했다가 닷새 만에 철회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김혜지 기자 heyji@

휴일도 700명대... '돌파 감염' 우려 커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일요일 확진자 26주 만에 최다
2학기 전면 등교수업 '비상등'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5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예방접종 설명회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가파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인도형)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돌파 감염'도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은 644명, 해외유입은 67명이다. 일요일 확진자(발표기준 월요일) 기준으로 700명대는 '3차 대유행'이 정점(작년 12월 25일, 1024명)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한 올해 1월 4일(1020명) 이후 26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최근 들어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존 감염경로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된 서울 마포구 음식점, 경기 영아학원 관련 확진자가 307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 100명 중 7

명은 ‘델타형’ 변이 감염자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델타 변이는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감염되는 ‘돌과 감염’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은경 방대본 부부장(질병청장)은 브리핑에서 “2주가 경과해도 드물게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돼 노출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해질 때까지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은 접종했다더라 꼭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에 사회
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번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
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pm 4.4\%$ 포인트), 응답
자의 71.6%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와 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 거리두기를 1
주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준비 중인 교육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다만, 현재 단계에선 계획대로 전면등교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호철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대변인은 “이미 서울 중학교는 등교가 확대된 상태이고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성화고는 전면등교를 하는 상황”이라며 “방역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정부 지침대로 백신 접종 등이 이루어지면 부담이 덜 할 것이란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주주 활력을 위해 긴급히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세종=김지영 기자 jye@

33兆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는 '부실'

취업 감소율 선진국 대비 선방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재정 일자리 사업 중 환경지킴이 등 14개 사업이 낙제점을 받았다. 해당 사업 참여자가 사업 종료 후 민간 일자리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다.

‘개선 필요’ 사업은 36개로 나타났다. 감액 사업을 포함하면 전체 일자리

사업 중 34.5%가 부실 평가를 받은 셈이다. '우수' 평가 사업은 14개, '양호' 평가 사업은 81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해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 성과 평가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지난해 성과평가 일자리 사업은 총 145개다. 정부는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3조6000억 원(추경 8조1000억 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접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국민 67만 명과 사업장 22만6000곳이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취업자 감소율이 전년 대비 -0.8%에 그쳤다. 이는 독일(-1.0%), 캐나다(-5.2%), 미국(-6.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선방한 것이다. 실업률 상승폭(+0.2%P)도 이들 국가(+1.1~4.4%P)보다 낮았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A vibrant underwater scene featuring a large, dark blue iceberg with a small white cabin on top. Several fish, including a large shark and smaller ones, swim around the iceberg. A cartoon diver in a black suit and blue fins is visible in the lower right. Sunlight rays filter down from the surface, and green foliage is visible at the top.

숨겨진 능력을 발견해서 개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iRD 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정보 보안 경영시스템〉

“돈도 사람도 없어” ISMS 인증제 中企엔 ‘그림의 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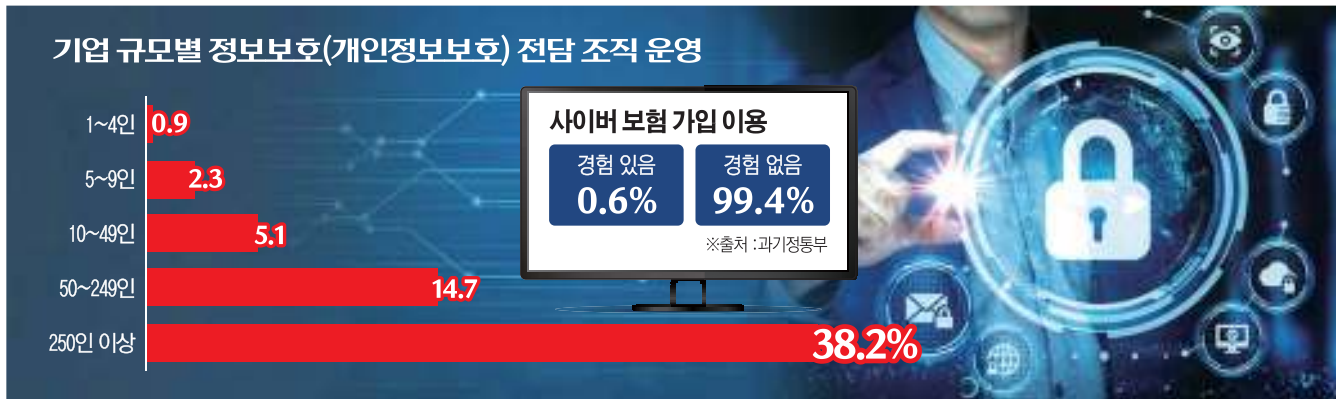
中企 정보보호 인력난

인증준비 6개월, 컨설팅비용 1억
개발자 모시기 ‘하늘의 별따기’
‘3년 주기 갱신’ 사후유지 부담
20곳 ISMS 미인증으로 과태료

#.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A 업체는 올해 4월 말 ISMS 인증을 신청했는데 준비에만 6개월, 컨설팅 비용만 1억 원이 들었다. 이 업체의 연 매출액은 149억 원으로 ISMS 인증 대상 기업이다. A 기업 대표는 만만치 않은 컨설팅 비용에 더해 인력을 구하는 데에도 애를 먹었다.

A 대표는 “IT 업계 인재 영입 전쟁이라고 해서 개발자 구인난이 심각한데 인증을 위한 인력을 구하기는 더 어려웠다”며 “그나마 운 좋게 1명을 구했다”고 했다.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간한 ‘2020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



보보호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비율은 1~4인 기업에서는 0.9%, 5~9인 기업에서는 2.3%, 10~49인 기업에서는 5.1%, 40~249인 기업에서는 14.7%로 나타났다.

인증을 받은 뒤도 문제다. ISMS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인증 발급 뒤 매년 사후심사를 받고 3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해야 한다. 담당 인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A 대표는 “담당 팀을 따로 꾸려야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인 탓에 담당

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실정”이라며 “인증 전 컨설팅 비용보다 사후 유지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애를 먹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 보호 지원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ISMS 인증 대상 기업인데도 인증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은 20곳에 달했다.

IS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SA가 담당하는 보안 인증 체계다.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심사해 KISA가 인증한다. 2001년 ISMS 제도가 만들어진 뒤 2012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PIMS 인증 제도가 생겼다. 2018년에는 ISMS와 PIMS가 통합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이 생겨났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 과정 5단계의 12개 항목과 정보보호 대책 13개 분야의 92개 항목 등 총 10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일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인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인증 시에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체의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ISMS 간편 인증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ISMS-P 간편 인증 제도는 올해 신설됐으나 ISMS 간편 인증은 현재까지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증 비용 부담 문제가 있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간편 인증 제도를 논의 중”이라며 “현재 인증 대상 기업은 아니더라도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해킹사고 98%가 中企, 기술유출 피해 수천억

사이버보험 가입경험 0.6%... 서울서 멀수록 보안인식 취약
지역 中企 노린 랜섬웨어 공격 잇따라... 정부 지원대책 필요

“중소기업, 특히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내 보안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다.

◇사이버 침해사고 98%가 중소기업=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중소기업의 보안 점검 및 지원을 해 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국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의 실적은 평균 4000~5000건에 그친다. 국내 전체 중소기업의 수가 600만 개를 넘어 서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0.8% 수준이다. 반면 사이버 침해 사고(신고·조사)는 대부

분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 KISA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는 대·중견기업이 2%, 중소기업이 98%다. 중소기업 해킹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금액은 2016~2018년 3년간 3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보안의식은 형편없다. ‘2020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중 사이버(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보험에 가입한 경험에 있는 곳은 0.6% 수준이다. 사이버 보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도 17.3%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중소기업 보안인식 수준이 더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동식 부산정보보안산업진흥원 SW융합사업부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과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보안 실무진과 컨설팅을 진행해도, 경영진 선에서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보안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 대부분 ‘비용’으로만 생각하곤 한다”고 진단했다.

지역 중소기업 보안의 가장 큰 문제로 ‘인력’이 꼽힌다. 대부분 기업에서 전산 인력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보안 내재화가 아닌 PC 수리 업무를 맡는 실정이다.

김 과장은 “2년여 전부터 지역 중소기업을 노린 랜섬웨어 피해가 시시때때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지역 보안업체가 거의 없다”며 “해커들 처지에서는 노다지인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력도 업체도 절대적 부족= 물론 KISA 등 정부는 K사이버방역 체계를 설립, 침해사고 발생 시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밀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21일 진행된 KISA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원태 원장은 “중소기업은 그 자체가 해킹 대상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을 통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공략하는 숙주로 이용되기도 한다”며 “지역과 중소기업의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컨설팅뿐 아니라 보안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여전히 지역 현장의 정보보안 인식과 인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정보보호 지원센터의 경우 하루에 3건 이상을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말은 범위가 워낙 넓어서다.

김 과장은 “하루 사이에 창원에서 부산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 시간과 컨설팅 시간을 종합하면 하루도 안 쉬고 매일 다녀도 2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업체 또한 부족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의 ‘2020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안 관련 기업의 81%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지상호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센터장은 “지역에 전문 보안업체들이 있으면 다른 기업들도 보안에 대해 인지하는 효과가 생길 텐데 대부분 업체가 수도권에 있다”며 “지방 보안업체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소는 기자 gogumee@

365일 집집마다, 산간오지까지

KESCO가 전기안전까지 로켓 배송합니다

전기고장 긴급복구해주는 [전기안전 119], [에베(EBER)서비스],
도시지역과 산간오지 주민을 위한 [전기안전 보안관 제도] 등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KESCO가 새벽부터 밤까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달려옵니다

**KESCO, 당신이 모르는
더 많은 세상과 만나고 있습니다**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네트워크 리더 -
KESCO는 이런 일도 합니다

- 발전소부터 가정집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및 기술지원
- IoT기반전기안전기술 개발 및 솔루션 보급
- 전기안전 국제기술협력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신재생 에너지 전기설비 검사 및 기술지원
- 전기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이광재>

李·丁, 정세균으로 후보 단일화…‘反명 연대’ 신호탄

<이재명>

이낙연 前대표와 협력 여부 주목
李 ‘흡수’ 압박속 丁 ‘완주’ 대립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 중 ‘반(反) 이재명 연대’ 측에서 합종연횡이 시작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일 이광재 의원을 꺾고 단일후보로 나서면서 2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추가 단일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예정대로 이 의원과의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세균·이광재 후보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며 “이광재 후보의 대한민국의 미래경제에 대한 원대한 꿈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합종연횡이 아닌 정책적 공감대를 토대로 한 ‘가치 단일화’라는 의미를 스스로 부여했다. 하지만 정 전 총리가 앞서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사실상 1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오른쪽)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세균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추격하기 위한 합종연횡으로 읽힌다.

정 전 총리 단일화에 따라 관심은 이전 대표로 옮겨졌다. 이 지사와 이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두 배가 넘는 만큼 3위인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추격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공교롭게도 이전 대표는 지난 3일 정 전 총리와 회동했고 단일화 결과가 발표된 날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서로 협의와 연대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들의 행보들이 연관 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는데 방법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여지를 두기도 했다.

이 전 대표를 돕는 의원들도 본경선에서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낙연계 한 의원은 본지와 만나 “지금과 같은 1강 1중 양상이 본경선까지 이어진다면 결선투표로 강제적으로 단일화되는 것보단 그 전 적정한 때에 선제적으로 지지선언을 하거나 단일화를 하는 게 낫다”며 “정 전 총리는 이 전 대표와 이미지와 정책이 너무 겹쳐 지지율이 오르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경선까지 후보주자들의 지지율이 정체된다면 2위인 이 전 대표로 힘을 모아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면서도 지지율 반등을 가정하자 “결선투표가 있으니 적절히 판단해 지지선언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결국 이 전 대표 중심으로 ‘반 이재명 연대’가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전 총리 측도 현 지지율 양상에 변동이 없다면 단일화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전 대표 측의 일방적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균계 한 의원은 본지와 만나 “이대로 간다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생기게 될 것”이라면서도 “지지율이 움직인다면 결선투표가 있으니 굳이 인위적으로 합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정세균 캠프 관계자도 통화에서 “정 전 총리가 추가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으니 지금 논의된 바는 전혀 없지만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며 “이 전 대표 측에서 우리를 흡수하려 여러 논리를 당연히 세우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먼저 단일화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 이재명 연대’ 명분으로 이 전 대표 측이 ‘흡수’를 압박하고, 정 전 총리는 완주한다는 각오로 지지율 반등을 기다리며 버티는 양상이다. 이 같은 기 싸움과는 별개로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진행될 토론회 등에서의 이 지사를 향한 공세, 재난지원금 등 현안을 고리로 한 지지 의원들 간의 세 대결은 행동을 함께할 전망이다. 또 현송영길 대표체제 경선 관리를 두고서도 이 지사는 지지하는 반면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비판을 지속하며 대립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

‘美 점령군 발언’이 소환한 역사인식…전문가 의견은

“역사, 함부로 다뤄선 안돼”

대권주자 1·2위의 이념갈등 촉발
“기준에 따라 해석 달리할 수 있어
정치 입맛 따른 소모적인 정쟁 불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건국(建國)’ 관련 발언에서 비롯된 역사인식이 대선 국면을 달구는 정점으로 떠올랐다. 이 지사의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표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망언”이라고 공격한 것이 대권 주자 1·2위 간 한국 현대사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촉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 의미 없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 대권주자 설전의 발단은 이 지사가 1일 경북 안동 이옥사 문화관을 찾아 한 발언이었다. 이 지사는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나.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고 표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후보 이 지사도 이어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저에 대한 첫 정치 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 발언을 왜곡 조작한 구대 색깔공세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받아치며 설전을 이어갔다. 또 이 지사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승전국인 미국은 일제를 무장해제하고 그 지배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했으므로 ‘점령’이 맞는 표현”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점령군’, ‘해방군’이란 표현은 기준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어 이 같은 논쟁은 사실상 불필요하며 정치권이 정쟁으로 삼은 것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의 경우 점령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일본과 싸워 일본 제국의 영토

로 돼 있던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라며 “한국 민족 점령이 아닌, 일본 제국의 통치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으로 과장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복 후 언론에서도 오스트리아, 조선, 일본을 ‘미점령 지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 명예교수는 “소련의 경우 약소민족을 도와 세계혁명을 한다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식민지배국에 오면 해방군이 된다”며 “이는 일종의 사회주의 노선의 용어”라고 말했다. 이어 “점령과 달리 해방이란 표현이 광복 후 언론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것은 후대 반미주의자들이 만든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대비되는 표현 자체가 위험한 역사 해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일본에 승리한 미국 덕분에 우리가 해방했으니 해방군이며, 동시에 미소 양군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군정을 설치했으니 이 경우엔 점령군”이라고 해석했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당시 미국은 남한에서, 소련은 북한에서 정치적 이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선 둘 다 점령군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설전은 오히려 정치적인 입지에 맞게 해석하는 정쟁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 소장은 “우파에선 미군은 해방군, 소련은 점령군이라 보고 좌파에선 반대로 본다”며 “이처럼 역사 인식을 자주 이념으로만 보니 우리 관점이 빠진 반쪽짜리 역사관이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명예교수 역시 “민족 역사에 아픈 면, 자부할 면들이 많은데, 정치인들이 현재의 본인 입지를 위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삼갔으면 좋겠다”며 “역사를 그렇게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고 꾸짖었다. 전 역사학자도 “양측의 논쟁은 논쟁거리가 아닌 그냥 문제로 삼고 싶어서 삼은 것이라 본다”고 꼬집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n@



‘文정부 탈원전 비판’ 맞손

대권주자인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5일 서울대 공학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교수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후원회장은 강금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원회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사진은 6월 성남시 경기콘텐츠포리아 랩 발동발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 위촉식. 사진제공 경기도

尹 “탈원전이 정치참여 계기”…전국 순회 돌입

주한규 교수와 만나 탈원전 비판
‘윤석열이 듣습니다’ 대전 첫 방문

지난달 29일 출마 선언 후 공식 활동을 자제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5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교수를 만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윤 전 총장은 서울 신림동 서울대를 찾아 주 교수와 만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를 저비용으로 생산해야만 우리 산업의 경쟁

력이 생기고 일자리에 대해 청년들의 희망과도 관련이 있다”며 “단순히 원전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안보와 정책과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민의 합당한 논의와 사회 합의로 추진된 것인가 의구심이 많고 이런 식의 졸속 탈원전 방향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총장을 관둔 것 자체가 월성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제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공개했다. 이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고, 정부 탈원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윤 전 총장은 현재 집이 과거 삼성전자 명의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적 있다는 이

유로 삼성전자와 윤 전 총장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설명돼 문제없다고 결론 났던 부분”이라며 “해의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된 전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전세금도 모두 반환됐다”고 얘기했다.

6일부터는 계획했던 전국 순회에 나선다. 투어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이 듣습니다’로 정해졌다. 첫 목적지는 대전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을 찾아 원자핵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과 오찬을 진행하며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박준상 기자 jooon@

민주당,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내일 결론

8일 추경 시정연설·23일 처리

여야는 5일 오는 8일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23일 처리를 목표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오는 7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

며 예결위원장 선출에 난색을 보였던 국민 의힘이 추경 처리를 위해 일시적인 합의를 본 것이다. 이로써 7일 민주당과 정부의 최종합의가 이뤄지고 8일부터 추경이 본격 심사되게 됐다. 당정이 의총을 통해 전국민 지급으로 바꾼다면 8일 시정연설은 정부안대로 하되 재원조달책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하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59㎡형 아파트>

인천 계양 예상 분양가 3.5억

노형욱 국토부 장관 간담회
3억~7억대 ‘3기 신도시’ 공급
“2~3년 내 집값 하락 대비해야”
무리한 영끌·추매 자제 주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4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2·4 대책과 작년 11월 전세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도 노 장관은 “올해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 등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1차 사전청약의 지구별 추정분양가를 공개했다.

추정 분양가는 인천 계양신도시에 전용면적 59㎡형 아파트가 3억5000만~3억7000만 원, 전용 79㎡형 4억4000만~4억6000만 원에 공급된다. 다른 택지지구도 분양가가 3억~7억 원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2~3년 이내에 주택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한 갭투자(전세를 낀 투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향후 시장이 급락할 수 있는 만큼 추격매수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형욱(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현재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급등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주택 공급 물량이 결코 적지 않다. 물량 총량은 충분하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매칭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며 “대다수는 도심 내 많은 주택이 공급되길 원하지만, 그동안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최근 불거진 서울 전세난에 대해 노 장관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했다.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이사 수요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대기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려 전세난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서울지역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는 약 7600가구로 지난해 약 2만 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평균치와 비슷하다. 전세 수급 문제는 연말까지 개선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내부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간 국토부의 정책 추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전에 방과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기자 ljj0403@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기재부 “조세 형평성 해쳐 부적절”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대상
이달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정부·여당이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 유예제 검토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 세제와 형평성 확보나 재산권 보호는 풀어야 할 과제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종부세 과세 유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등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매년 세액의 1.2%를 이자로 갚되 나머지 세액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종부세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과세 유예제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종부세가 2%로 된다면(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과세한다면) 과세 이연(유

예)을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엔 여당 의원이 과세 유예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받고 있다. 과세 유예제가 도입된다면 이달 임시국회 중 ‘상위 2% 종부세 과세’ 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과세 유예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세금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에선 과세 유예 사유를 재난 상황이나 도산 위험, 중상(重傷)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장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부담도 늘어났는데 재산세는 과세 유예제 도입 논의가 없다. 기재부 역시 “종부세만 예외적으로 타 세목보다 우대해 장기간 유예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일각에선 과세 유예제가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도 의심한다. 최병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누적되는 납부 유예 금액으로 인해 (소유자가) 해당 보유 주택의 처분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중흥, 대우건설 품었다

매각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KDBI “특혜 매각 사실무근”
2조원대 초반 가격 예상

KDB인베스트(KDBI)가 대우건설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을 선정했다. 매각 과정에서 ‘특혜매각’ 논란이 일면서 불거졌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I는 5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흥 컨소시엄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중흥건설은 경쟁자인 스카이레이크-DS네트웍스 컨소시엄을 제치고 대우건설을 품을 기회를 잡았다. 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은 예비 대상자로 지정됐다. 2018년 1월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대우건설의 해외사업장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매각이 불발된 이후 3년만이다.

이대현 KDBI 대표는 “매각 대금, 거래의 신속·확실성, 대우건설의 성장과 안정적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대우건설의 영업과 임직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됐다”고 설명했다.

인수가격은 2조 원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있다. KDBI는 애초 지난달 25일 본입찰을 마감했다. 중흥건설 측은 2조3000억 원을, 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이 1조8000억 원을 각각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본입찰 이후 중흥건설은 인수가격과 비(非)가격 조건의 일부 수정을 KDBI에 요청했다. KDBI는 이에 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에 중흥건설의 수정 요청 제안 사실을 알리고 원할 경우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

했다. 중흥건설이 2위와의 인수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에 인수 불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KDBI가 양측에 새로운 가격을 써내라고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재협상은 없었다”면서 “인수 후보에서 최초 제안서에 일부 조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일 뿐,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매각 시기가 너무 빠른 점을 지적하면서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두 차례 딜이 깨지면서 대우건설은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린 만큼 MOU를 거쳐 끝까지 딜을 성사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다”며 “이번 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설산업의 동향과 매매 타이밍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의 매각 시기와 관련 ‘2년 정도 밸류업 후 매각을 할 것 같다’고 밝힌 후 밸류업 작업을 해왔는데, 시기 상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난해 대우건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원매자들의 태핑(수요조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매자들이 프라이빗딜을 원했고, 올해 말까지 매각 시기를 늦추기 보다는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입찰을 두고 ‘매각 작업이 원칙 없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시된 인수가격이 낮아 재입찰을 하는 경우는 더러 있어도 인수가격이 높아 재입찰을 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10년 동안 100만* 고객이 선택한 녹차건강기능식품

메타그린 골드



한 번만 경험해보면 꾸준한 습관이 되는 메타그린 골드, 지난 10년 동안 100만* 고객의 선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연구하여 설계된 녹차 카테킨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가볍고 원활한 대사 리듬을 완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습관에 메타그린 골드를 더하세요.

*2012년 출시부터 2021년 2월까지 메타그린 누적 구매 고객수

10th
META GREEN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스마트팜서 농업 미래 봤다” 청년들 귀농 러시

〈글 쓰는 순서〉

- ①K스마트팜 구축 본격화
- ②기술력·현지화 두마리 토끼 잡아
- ③한계 없는 K농산물 수출
- ④미국인 입맛 사로잡은 김치
- ⑤무엇 달인에게 듣는 청년농 수출
- ⑥이제는 국내 넘어 세계로
- ⑦무엇이 농업 업그레이드 시키나

스마트 농업이 확산하면서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서 귀농 가구 중 30대 이하 귀농 가구 수는 2019년 1209가구에서 1362가구로 12.7%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39.1%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정책적 유인과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올해 스마트팜 7000ha 보급 목표 = 2030 청년농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팜(첨단농업)이다. 스마트팜은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이다.

스마트팜은 온실·축사·노지 등에 첨단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생육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이다. 작물 생산, 가축 사육 등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생육환경을 조성해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줄일 수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현황

경북 상주(42.7ha)

- 스마트팜 주력품목과 플랜트 수출 거점화
- 청년 유입-성장-정착의 원스톱 지원 모델 구축
- 청년 임대주택, 복지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
- 주력 분야: 농업용 로봇
- 주력 품목: 토마토, 딸기, 오이, 포도, 멜론

전북 김제(21.3ha)

- 농진청-종자센터-식품클러스터 연계 농생명 연구개발 추진
- 기능성 식품·품종 개발
- 주력 분야: ICT 기자재
- 주력 품목: 결구상추, 아스파라거스, 오이, 가지, 딸기

경남 밀양(22.1ha)

- 품종 다변화(미니 파프리카, 딸기(금실) 실증·수출 확대
- 해외 농업기술교육 적용한 교육커리큘럼 운영
- 인근 나노 국가산단 등을 연계, 에너지절감 추진
- 주력 분야: 스마트팜 구조자재
- 주력 품목: 딸기(금실), 파프리카, 토마토, 풋고추

전남 고흥(33.3ha)

- 기후변화(온난화) 대비 아열대 작물 육성 및 양액 등 수입대체화
- 지역주민 참여 생산·육묘 단지조성 및 선도농가 APC 활용 유통
- 주력 분야: 기후변화 대응
- 주력 품목: 만감류, 멜론, 토마토, 딸기

스마트팜 도입으로 생산량 32% ↑ 노동시간 14%·병해충 6% ↓
올 ‘스마트팜 혁신밸리’ 7000ha 조성 목표, 전국 4개 거점 마련
보육센터 수료 댄 농장 우선 입주 등 혜택… 교육 경쟁률 3대1

경을 조성해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줄일 수 있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팜 도입으로 생산량은 32.1% 향상됐고, 반면 노동시간은 13.8%, 병해충 발생은 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선정해 청년의 창농을 이끌어내고,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내 스마트팜 보급 면적은 2014년 405ha에서 지난해 5383ha로 급증했다. 올해까지 보급 목표는 7000ha다. 스마트팜 활용은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현장에서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한국농촌경제연구원(스마트팜 도입 의향 조사에서는 시설채소 분야에서는 68.1%, 축산 60.0%, 노지채소 56.9%

가 스마트팜을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형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밸리는 청년농에 대한 창업보육을 비롯해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미래농업을 육성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청년농을대상으로 20개월의 이론·실습교육을 진행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한다.

보육센터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 우선 입주, 스마트팜 청년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개념도



(농신보) 보증비를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30억 원까지 스마트팜 청년 종합자금 대출신청 자격도 부여되며 농신보 보증률은 90%로 우대받을 수 있다.

실제로 청년들의 관심도 뜨겁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모집한 스마트팜 교육생의 경쟁률은 3대 1을 기록했다. 208명 정원에 625명이 지원했고, 교육신청자의 연령은 30.3세로 지난해 31.5세에서 1.2세 낮아졌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혁신밸리에 청년과 기업이 모이고, 첨단기술, 데이터, 노하우가 축적되면 스마트팜이 포도송이처럼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혁신밸리 하반기 본격 시동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4개 거점에 마련된다. 올해 하반기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경북 상주를 비롯해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이 내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하는 경북 상주는 총 13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42.7ha 규모로 조성된다. 토마토와 딸기, 오이, 포도, 멜론 등 스마트팜 주력품목 생산과 함께 플랜트 수출 거점화 역할을 하게 되며, 특

히 농업용 로봇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전북 김제에 907억 원 예산, 21.3ha로 마련 중인 혁신밸리는 농촌진흥청, 종자산업진흥센터와 연계해 농생명 연구 특성화를 추진한다. 아스파라거스와 결구상추 등 기능성 식품과 품종 연구에 나선다. 아울러 ICT 기자재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남 밀양에 22.1ha로 조성되는 혁신밸리에서는 현재 주력 수출 품목의 품종 다변화를 꾀한다. 딸기와 파프리카 등의 신 품종 개발과 함께 해외 농업기술교육을 적용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나노 국가산단, 부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에너지절감 기술 실증에 주력한다.

33.3ha 규모로 조성되는 전남 고흥 혁신밸리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아열대 작물을 육성해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산·육묘 단지를 조성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활용한 유통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공동기획·농림축산식품부·이투데이

“데이터 기반 농사 고품질 재배, 스마트팜은 든든한 동반자”

‘귀농 10년차’ 김태훈 월화수목금토마토 대표

“스마트팜(첨단농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저처럼 작물에 대한 재배 경험이 짧더라도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김태훈 월화수목금토마토 대표는 스마트팜을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월화수목금토마토는 전북 익산 최초의 스마트팜이다. 약 4600㎡ 농장에서 토마토와 오이를 생산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귀농 전 IT 기업의 선임연구원이었다. 매일 농사를 짓는 둘째 처형이 너무 행복해 보여 귀농을 생각했던 그는 농업이 얼마 남지 않은 블루오션이라고 판단해 실천에 옮겼다.

김 대표는 10년 전인 2011년 퇴사했다. 하지만 무작정 농업에 뛰어드는 대신 차근차근 귀농을 준비했다. 퇴사 후 먼저 한국농수산대학 과수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교육까지 이수한 그는 본인이 일했던 ICT와 접목한 스마트팜으로 눈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재배 품목도 대추방울토마토로 결정했다. ICT를 접목하는 데 보다 수월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원래는 체리과수원을 짓고 싶었는데 우연히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의 ICT 교육을 듣고 방향을 전환하게 됐다”며 “ICT 온실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4600㎡ 농장서 토마토 등 키워
‘벤로형 온실’ 작물 재배 수월
조급증 버리고 철저한 준비를

사례를 접하면서 스마트팜을 운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팜 운영을 위해 온실 교육만 200시간을 넘게 받았다. IT 기업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를 농업에 접목하는데 그만큼 많은 공을 들였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팜을 금방 지을 수 있지만 지식이 없다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골조부터 시작해 커튼, 수경재배시설, 난방시설, ICT 장비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없이 착공을 시작하게 되면 다음에 유지보수비용 및 운용비용에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스마트팜 운용을 정말 잘 하는 농가들을 방문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동시에 ICT 교육을 통해서 이론적인 것도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찾아낸 것은 벤로형 온실이다. 벤로형 온실은 일반 온실보다 높이가 높은 온실로 작물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재배 작물을 다양



김태훈 월화수목금토마토 대표는 “스마트팜은 작물에 대한 재배 경험이 짧더라도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김 대표의 농장 전경

하게 바꿀 수 있는 확장성도 뛰어나다. 아직은 유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벤로형 온실의 특징점은 온도가 일반 온실보다 높아 작물을 키우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러 품목으로 전환할 수 있어 확장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ICT 환경제어. 스마트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난방과 환기시설 등의 기본적인 설비들이 잘 갖춰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온실이 최적의 상태가 유지돼야 이를 바탕으로 온실 내의 환경데이터를

추출하고 수집해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상태로 온실 환경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데이터 기반의 재배 환경이 스마트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는 손꼽았다. 김 대표는 “작물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감이나 느낌이 아닌, 식물과 온실환경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을 재배하기에 오랫동안 작물을 재배했던 분들의 재배 경험을 80%~90% 이상 따라갈 수 있다는 데에 스마트팜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월화수목금토마토는 스마트팜 도입 1년 만에 선도농장으로 선정될 만큼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제 앞으로는 대추방울토마토 생즙 제품 출시는 물론 약 1만 평(3300㎡) 규모의 ICT 융복합 농장을 조성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체험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연간 120톤의 토마토와 오이를 생산하는 김 대표는 올해 조수익을 2억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청년들을 비롯해 스마트팜을 시작하려는 이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김 대표는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꼼꼼히 계획을 세운 뒤 귀농을 해야 실패가 없다”며 “이제는 농업도 스마트하게 변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진행되는 스마트팜 관련 교육이나 농업대학 등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닦은 후 농사를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다 가져서 더 우수한 KT 클라우드

KT 클라우드는 전국 5개의 CDC, 14개의 IDC, 그리고 전국망 네트워크 인프라 강점으로
고객의 환경에 최적화 된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은 더 줄이고, 신속한 문제 감지와 대응으로 강력한 보안의 KT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DIGICO KT

가입문의 enterprise.kt.com

KT 클라우드
더 알아보기



혁신조달기업 수출 2년내 50% 늘릴 것

홍남기,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가점 부여
디지털세 10월까지 대응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혁신조달기업을 2023년까지 60%로 높이고 기업당 평균 수출액을 6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50%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의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혁신조달기업 2023년까지 수출 50% 확대=정부가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각종 수출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발표한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을 보면 ‘K-혁신제품 해외진출 통합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수출지원사업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혁신조달기업에 선정되면 조달청의 ‘K-방역통합지원사업’, 코트라·K-방역통합지원사업 등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글로벌 역량진단(GCL)’ 서비스를 통해 혁신조달기업의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최대 300만 원의 샘플 해외 배송비도 지원한다.

또 정부는 ‘혁신조달기업 IP전담지원센터’를 개설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IP) 확보 및 보호를 지원하고 혁신제품의 해외인증규격 획득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도 나선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증서를 보유한 기업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최초 구매자로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정책으로 2019년 처음 도입돼 628개사의 688개 혁신제품이 지정됐다.

◇디지털세 국익 관점에서 철저 대응=이달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세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 개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고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입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다. 기재부는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국내 세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 내는 세금을 해외에 내는 대신 구글, 애플 같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세금을 더 내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협약이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 보증, 손실보전 등 정부의 정책적 기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타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수의계약 등 일부 사안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경쟁 위생적 요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생검역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검역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위생검역 인력·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김 부총(오른쪽)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6층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업무 관련 설명을 들은 후 질문을 하고 있다.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6층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업무 관련 설명을 들은 후 질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차전지 기술개발·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총력”

문승욱 산업부 장관 현장행보

이차전지 산업전략 발표 앞두고
현장 목소리 청취 등 소통 강화
“2030년 이차전지 1등 국가 목표”

이차전지 산업발전 전략 발표를 앞두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사용 후 이차전지 시장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이차전지 업계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기술개발,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SDI 울산사업장을 방문한 문 장관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차전지 산업발전 전략 발표를 앞두고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 강화 차원이다.

문 장관은 “산업부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 왔다”며 “논의 과정에서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문승욱(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이차전지 생산 기업인 삼성SDI 울산사업장을 방문해 전영현 삼성SDI 사장과 함께 이차전지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문 장관은 “지난주 혁신성장 빅3 회의에서 이차전지 산업발전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용 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및 서비스 산업 발굴 등 이차전지 산업영역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차전지·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제조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산업을 보다 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삼성SDI, 예코프로비엠, 천

보, 정관, 이수화학, 일진머티리얼즈, 동일알루미늄, 필에너지, 하나기술 등 이차전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차전지 산업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 업체는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우수 인력양성, 민관 협력과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지원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문 장관은 UNIST에 방문해 석·박사를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차전지 인력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 역량을 함께 보유한 융복합 전문인력의 가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제2 이선호 사고’ 막겠다 모든 항만에 안전점검관 배치

출입자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정부가 제2의 평택항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항만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항만 출입자는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4월 22일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 씨를 비롯해 최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항만의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장에서 10년간 280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과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

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만 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고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 상시 감독할 계획이다.

항만 안전관리자 수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고 위험작업, 하역 장비와 근로자 간 혼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한다.

이번 사망 사고를 낸 컨테이너의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항만이 24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현장인 점을 고려해 모든 항만 출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토록 강제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디지털 대전환·인재 양성에 힘쓸 것”

임혜숙 과기부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

‘민간 혁신’ 마중물 되도록 노력
28㎐ 5G 공동구축 아직 고려안해

“디지털 뉴딜이 민간의 혁신을 가속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국가 차원의 핵심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신종 감염병이 일상화하는 시대에 대비하겠다.”

임혜숙(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세종 과학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로 △디지털 대전환 △R&D 100조 시대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그는 “디지털 뉴딜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는 등 소



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G 통신망 구축과 활용방안도 언급했다. 임 장관은 “5G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 조만간 개최하는

5G+전략위원회에서 B2B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핵심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 양자기술, 6G 등에서 연구를 확대하고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임 장관은 신종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그는 “바이러스 기조연구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대응 능력과 기조연구 주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28㎐ 5G와 국산 치료제 출시, OTT 정책 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는 28㎐ 5G에 대해서는 “28㎐는 주파수 특성상 응용이 제한돼 공동구축은 아직 살펴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신 3사의 기지국 의무 구축에 대해서는 내년엔 좀 더 살펴보고 방향, 정책을 말하는 게 좋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임 장관은 OTT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 “디지털미디어 관련은 과기부가 주체가 되고 관련 부처, 업계의 협력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흥시켜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중국판 우버〉

美 상장 과심죄? 中 ‘디디추싱’ 앱 다운 금지령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제재
美 증시 안착 5일 만에 날벼락
트럭 공유 플랫폼 등 3곳 조사
中 정부, IT기업들에 잇단 철퇴



글로벌모바일인터넷퍼런스(GMIC)에서 걸린 디디추싱 로고. 베이징/AP뉴스시스

중국 정부가 자국 대신 미국증시를 선택한 IT 기업들을 상대로 철퇴를 휘두르고 있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은 미국증시에 안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당국으로부터 연이은 날벼락을 맞고 있다.

중국 사이버 안보 사령탑인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CAC)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디디추싱 앱 다운로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률인 ‘인터넷 안전법(사이버 보안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CAC는 “디디추싱은 불법적인 개인 정보 수집 문제가 있다며 ‘문제의 개선에 진지하게 힘쓰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나 앱 다운로드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새로 앱을 내려받는 것에만 적용된다. 이미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디디추싱은 “우리가 위협을 감지하도록 안내해준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문제를 최선을 다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AC는 2일 디디추싱에 대한 사이버 안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규 가입자 등록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디디추싱 조사 배경으로 ‘국가안보’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 철퇴를 맞은 알리바바그룹홀딩 때보다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2년 설립된 디디추싱은 경쟁업체 우버의 중국 사업부(우버차이나)를 인수하며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회원 3억7700만여 명과 관

련된 운행기록과 위치 정보, 이동수단 이용 패턴 등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디디추싱은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NYSE)에서 상장해 44억 달러(약 5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공개(IPO)로는 2014년 알리바바(250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였다.

일련의 조치가 디디추싱의 뉴욕증시 상장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디디추싱이 중국이 아닌 미국증시를 택해 ‘찍혔다’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 데이터를 미국 측에 제공됐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중국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이후 정부는 대대적으로 IT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국의 고강도 조사 우려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일 디디추싱의 주가는 5.3% 급락했다.

CAC는 디디추싱에 철퇴를 가한 데 이어 5일 화물트럭 공유 플랫폼인 원만만과 휘저방, 온라인 구직 앱 BOSS즈핀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이버 안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 모두 공교롭게도 미국증시 상장사다. BOSS즈핀은 5월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원만만과 휘저방은 지난달 NYSE에서 IPO를 실시해 16억 달러를 조달한 만방집단의 자회사들이다.

아울러 디디추싱을 포함해 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간 4개 업체 중 3곳 업체가 모빌리티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미국 측에 개인과 위치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미국 젊은층도 내집 마련 ‘하늘의 별 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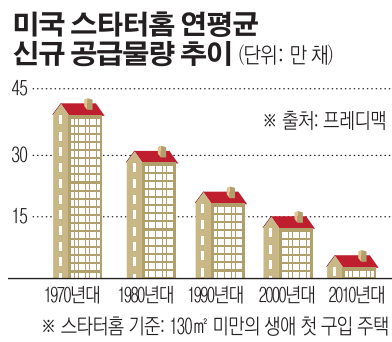
스타터홈 공급 50년 만에 최저
첫 주택 구매 연령 30세→33세

미국에서도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사이에서 ‘스타터홈(Starter Home·처음 장만하는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종을 울렸다.

미국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130㎡ 미만의 스타터홈 공급은 현재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집값 급등과 치열한 수요 경쟁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스타터홈 시장까지 위협하면서 밀레니얼 세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주 공개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4월 전국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급등해 1987년 지수가 도입된 후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내 집 마련 시기도 점차 늦춰지고 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미국 내 첫 주택 구매 평균 연령



은 10년 전 30세에서 지난해 33세로 높아졌다.

문제는 주택 계층 사다리의 가장 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터홈 시장의 마비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레디맥의 샘 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 사람은 스타터홈을 떠올리면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그들은 스타터홈 품귀 현상이 저소득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는 여파가 중상위 계층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반인스티튜트 분석에 따르면 25~34세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들은 60대 초반이 됐을 때 주택자산 중간값이 15만 달러(약 1억69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35~44세에 집을 산 사람들은 주택자산이 평균 7만5000달러 더 적

었다.

게다가 주택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최근 다른 일반 구매자 외에 투자자와 헤지펀드, 거대 부동산 기업 등과도 매매 경쟁을 하고 있다. 여름철 매매 시즌이 끝나면 이들은 다시 임대주택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년층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업체 질로우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83%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최소 한 가지 목적으로 돈을 저축했고, 이 중 59%가 이를 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비즈니스인사이드는 “금리가 지난해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충분한 저축액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더 쉬워졌다”며 “하지만 재택근무와 역사적인 주택 부족이 겹치면서 집값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전국 거의 모든 곳에서 입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는 불평등한 주택 불이행이 완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붕괴 참사 美 아파트 철거

최근 붕괴 참사가 일어난 미국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의 12층 아파트가 4일(현지시간) 폭파·철거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24일 붕괴해 아파트 전체 136가구 중 55가구가 무너졌으며 사고 11일째인 이날 기준 사망자는 24명, 실종자는 121명으로 집계됐다. 서프사이드/AFP연합뉴스

美 IPO 열기 17년 만에 가장 뜨겁다

지난주 14개社 각 1억달러 조달
M&A 지출도 1.7조달러 돌파

미국 자본시장의 움직임이 여느 때보다 활발하다. 지난주 미국의 기업공개(IPO) 열기가 17년 만에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가 하면, 올해 상반기 미국 기업과 관련한 인수·합병(M&A) 지출이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중국 디디추싱과 크리스피 크림 등 14개 기업이 지난주 미국에서 기업공개(IPO)로 각각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뜨거운 한 주를 보냈다. 사이버 보안회사, 의약품 개발사, 터키 전자 상거래 플랫폼 등 업종도 다양했다.

월가 은행들도 IPO 풍년 덕분에 수수료 잔치를 벌였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과 미국 보안업체 센티널원은 지난주 IPO로 총 56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에 거래의 수수료를 안겨다 줬다.

전체적으로 월가 주요 은행들이 IPO를 지원한 대가로 올린 수수료 수입만 약 4억

달러에 이른다. 초과배정옵션을 행사하면 추가로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NBC는 은행들이 할당된 주식을 모두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2일 증가 기준으로 2억 5900만 달러의 장부상 이익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가 은행들은 단 일주일의 IPO를 통해서만 총 6억 59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올해 넘쳐나는 유동성 속에서 현금을 쌓아 올린 기업들의 M&A도 수십 년 만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상반기 미국 기업들과 관련된 M&A 지출이 총 1조7400억 달러(약 1966조 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40여 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계속되는 부양책과 최근 분기 실적 호조로 인해 기업들의 총알이 두둑해진 것이 시장 활기 원동력이었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소비재 행동과 시장 패턴이 변화해 이에 발맞춰 혁신 전략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압박도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변효선 기자 hsbun@

中, 동남아 투자로 美 포위망 뚫는다

말레이시아 태양광 모듈 공장
캄보디아에 인프라 기술 공여
남중국해 주변국 관리 분석도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과 경제협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무력화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을 회유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내놔다.

지난달 24일 말레이시아는 중국 라이젠 에너지가 422억 링깃(약 11조4700억 원)

을 투자해 대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달 22일 중국은 캄보디아에 인프라 개발 기술 공여를 위해 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초에는 51억 달러(약 5조7700억 원)를 투자해 580km 길이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라오스와 합의, 공사에 들어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베트남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올해 1~4월 베트남에서 61개 프로젝트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막대한 투자 공세를 통해 경제 협력력을 강화, 미국이 구축하려는 대중국 포위망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6월 중순 주요 7개국(G7) 정

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인프라 지원 계획에 합의했다.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밀착을 시도하자 중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주변 국가들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5월 말 중국 군용 수송기가 말레이시아 영공에 접근하자 말레이시아는 16대의 제트기를 비상 출격시켰다. 중국 어선들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주변에 계속 정박 중이며 필리핀 정부는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함께 리아우제도 바탐 섬에 350만 달러 상당의 해경훈련센터 건설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검사·감독 부문 정직 2명 포함 관련 직원 8명 조치
사모펀드 제도운영 태만 지적…금감원 “보완하겠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검사·감독업무의 부실을 지적하며 관련 직원에게 정직 처분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놓고 시장에 추측이 나돌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감사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 피해를 초래한 금융사건을 대상으로 이번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부문에서는 ‘태만’이라고 표현하며 금감원 행태를 문제 삼았다. 또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위법부당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회사 측의 설명만 믿고 검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금의 부정거래 관련 민원 조사업무도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9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 합병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금융위가 해당 회사에 대해 혐의가 다른 내용을 조사하자 인수합병 민원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찰과 금융위가 수사·조

감사원, 금감원의 사모펀드 감독 관련 조치 사항

-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관련자 1명 주의요구
- 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 태만 관련자 1명 징계처분(정직)
-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정거래 관련 민원 및 조사업무 부당 처리 관련자 3명 징계처분(1명 정직, 2명 경징계 이상)
- 금융기관 검사결과 처리 및 상시감시 업무 철저. 관련자 3명 주의요구

사 중이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종결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 등을 태만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게 정직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정거래 관련 민원 및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정직(1명), 경징계 이상(2명)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사모펀드의 제도 운영, 판매, 설정 등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검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모펀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요건 등을 완화하여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 투자자에게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검사·감독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을 분할·발행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착수하고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및 관련 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사모펀드 설정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설정·설립보고에 대한 접수·확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설정·설립보고서와 집합투자계약상 투자대상 자산, 운용방법 등이 상이

한데도 보완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감사원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감독 업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존중한다. 다만 금감원이 주어진 여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나름 역할을 했는데 이런 미비점이 나와서 안타깝다.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감사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1차 공익감사청구 처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감사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와 관련해) 금감원장에게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하고도 적정 조치하지 않는 일이 없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며 “공모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증권을 다수의 사모펀드로 분할·발행한 데 대해 조사하여 적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지희 기자 jhsseo@

“제휴 포인트는 안 돼요” 카드 포인트 현금화 사각지대

롯데 엘포인트·BC 탑포인트 등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만 가능
당국 “제휴사 포인트는 권한밖”

#A 씨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포인트가 쌓여 있으니 소멸되기 전에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올해 만료될 포인트는 15만 포인트가 넘었지만 그가 쓸 수 있는 건 10만 포인트뿐이었다. 카드 규정상 1년에 10만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올해 5만 포인트, 즉 5만 원을 날리게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금융결제원의 카카오페이 또는 여신금융협회의 포인트 통합조회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카드 포인트가 현금

화됐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현금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뿐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대표 포인트는 롯데카드의 엘포인트, 비씨카드의 탑포인트 등이다.

A 씨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삼성카드의 쉼보레 슬림 카드를 이용했고, 여기서 쌓인 포인트는 쉼보레오도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즉 삼성카드의 대표 포인트가 아닌 제휴사(쉼보레)의 포인트여서 현금화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A씨는 “포인트를 쌓기 위해 온 가족이 이 카드만 사용했다”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카드들의 선포인트 시스템이 해당 카드를 더 쓰도록 유도해 현금화하지 못하는 포인트를 쌓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선포인트 시스템이란 해당 카드로 제휴사의 자동차를 구

매했을 시 20~50만 원을 먼저 깎아준 후 카드에 포인트가 쌓일 때 자동차 할인 금액만큼 포인트를 차감하는 것이다. 자동차 할인 금액보다 카드 포인트가 덜 쌓이면 고객은 차액을 돌려줘야 해 돈을 토해내지 않으려면 해당 카드를 더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선포인트 된 금액만큼 포인트가 쌓이면 고객에게 문자로 안내가 간다”며 “제휴 포인트의 현금화 여부는 카드사가 아닌 포인트를 운영하는 회사(제휴사)의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상황은 다른 카드도 마찬가지다. 현대카드가 현대자동차와 제휴를 맺어 출시된 현대 모빌리티 카드 역시 결제 시 현대카드의 대표 포인트가 아닌 블루멤버스 포인트, 즉 현대자동차의 포인트가 쌓인다. 이 역시 현금화할 수 없는 포인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휴)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자동차 회사랑 카드사랑 일

정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제휴 관계가 복잡해 그런 포인트들까지는 현금화가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금융사가 아닌 제휴사에) 현금으로 주는 건 강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금융당국이 제휴사에도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적용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카드사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이 손 놓고 책임 돌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당국이 카드사가 제휴할 때 제휴 포인트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달면 카드사가 설계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며 “현재 (카드사의 제도)는 혜택을 많이 줄 것처럼 해놓고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위버스(Weverse)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BTS 카드 나온다

신한카드, 위버스샵과 PLCC 계약
임점 아이돌 국내의 팬덤 상품 출시

신한카드가 방탄소년단(BTS), 세븐틴 등 위버스샵 임점 아티스트 팬덤을 위한 PLCC(상업자 표시 카드)를 연내에 선보인다.

신한카드는 하이브의 자회사이자 글로벌 팬덤 플랫폼 기업인 위버스컴퍼니와 함께 PLCC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카드와 위버스컴퍼니는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팬 커머스 플랫폼 위버스샵(Weverse Shop)에 입점해 있는 주요 아티스트의 팬들을 위한 특화된 전용카드를 개발해 올 하반기 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위버스컴퍼니는 커뮤니티 및 미디어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버스(Weverse)와 아티스트 공식 상품을 판매하는 위버스샵(Weverse Shop)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위버스에는 BTS, 세븐틴 등 국내외 27팀의 아티스트가 입점해 글로벌 233개 지역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펼치고 있다.

신한카드는 카드 디자인부터 혜택,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위버스샵을 이용하는 팬덤에 걸맞는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의 굿즈를 구입할 시 PLCC를 이용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식이다. 다만, 신한카드는 세부적인 사용요건 등은 위버스컴퍼니와 향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PLCC파트너십 계약을 계기로 위버스샵에 입점해 있는 주요 아티스트의 팬들을 위한 특화카드를 제공하게 돼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모두의 신세계 하나카드’ 출시 콜라보레이션 협약

하나카드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하나카드’ 출시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모두의 신세계 하나카드’를 첫 상품으로 출시했다. 2018년 10월 출시한 2종의 체크카드(신세계 하나·시코르 체크카드)에 이어 출시 3년 만에 신용·체크카드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됐다. 하나카드와 신세계백화점은 제휴카드를 기반으로 하나카드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과 전국 12개 지역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최근 이베이 코리아

인수 등 공격적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다양한 콜라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손님들의 소비심리 확산 및 2030MZ 세대의 명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백화점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과의 제휴를 통해 지역거점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것에 1차 목표를 뒀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사와 유통사 간의 성공적인 제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지현 기자 sjy@



권길주(오른쪽) 하나카드 대표이사와 차정호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을지로 하나카드 본사에서 제휴협약식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카드

‘작전 개미’ 판치는 코인시장

▶1면서 계속

A·B씨가 겪었던 코인 시장은 암묵적으로 시세 조작에 동조하고 있다. 소위 ‘세력’이라 일컫는 유동성 공급책들이 등장하면 단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개미들이 뛰어들기 때문이다.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방에서는 수시로 “세력 물었다”, “버스가사 왔다”며 거래를 독려했다.

문제는 시세 조작에 나서서는 세력이나 투자에 가담하는 개미들도 코인 시장이 무법지대라는 것을 학습했다는 점이다. 실제 B씨는 “처벌 가능성이 이제 생길 듯하다”면서도 “전에 한 일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투입한 자금도 소규모

(문제 소지가 없을 것)”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식 시장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세 조작이 발생하는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한국거래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소지가 있는 거래를 금융감독원에 이첩하기도 한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의 경우 업권법이 없어 (해당

행위에 대해) 특별히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진 않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통보 의무는 있지만, 시세 조작에 대한 수사·신고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많아지면 수수료를 취득하는 주체가 때문에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이를 적발할지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청소년이라는 미래’를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첫걸음

[하나금융그룹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청소년의 내일을 지키는 것이
모두의 미래를 키우는 것이기에
하나금융그룹은 그루터기재단을 통해
청소년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발전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청소년그루터기재단

보호시설 청소년 지원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청소년 자살, 중독 예방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서울 갈월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블루마켓을 이용해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왼쪽). GS칼텍스가 CES 2021에 제출한 영상 속 미래형 주유소 모습.



드론배송 이어 중고거래까지 주유소의 무한변신

오일뱅크 ‘블루마켓’ 출시
안전한 중고거래 공간 제공

GS칼텍스 ‘에너지플러스’
주유·세차·주차 ‘원스톱’ 대행

주유소의 변신이 심상치 않다. 주유 기능을 기본으로 전기차 충전, 택배 거점, 드론 배송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등 공간비즈니스 사업으로 무한팽창 중이다.

5일 현대오일뱅크는 보너스 카드 앱 ‘블루(BLUE)’에 중고마켓 플랫폼 ‘블루마켓’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블루마켓은 보너스카드 회원이라면 별다른 인증이나 절차 없이 전국 352개의 직영 주유소를 이용해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회사 관계자는 “주유소는 거래 장소를 정하기 쉽고, 사업장에 CCTV나 관리자가 있어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며 “주차공간 등이 있어 차량을 이용한 대형 물품의 직거래도 훨씬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는 쿠팡과 협업해 특정 시간대에 주유소의 남는 공간을 로켓배송 물류센터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50여 곳까지 거점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말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energy plus) 허브’를 공개한 GS칼텍스는 5일 ‘에너지플러스’ 모바일 앱의 베타 서비스 버전을 출시했다. 에너지플러스 앱은 ‘바로 주유’ 서비스와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로 주유’ 서비스는 고객이 유증, 주

유량 등 주유 패턴과 결제수단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주유소에서 바코드 스캔이나 핀 번호 입력만으로 주유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고객이 GS타워를 방문해 전담 직원에게 차량 키만 맡기면 주유·세차·주차를 한 번에 할 수 대행해주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다.

GS칼텍스는 에너지플러스 허브를 바탕으로 카셰어링과 전기·수소차 충전 등 모빌리티 서비스, 택배와 드론 배송 등 물류서비스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SK에너지의 주유·차량관리 플랫폼 ‘머핀’은 주유소 손 세차뿐만 아니라 출장 세차, 아파트 단지 내 세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주유소 480여 곳에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주차대행, 자동차 정비·보험 등 다른 차량관리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SK에너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분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에쓰오일도 내년 상반기 주유·차량관리 서비스 플랫폼 ‘유래카(油來Car)’를 출시할 계획이다. 유래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주유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다. 타이어 구매·장착 서비스도 예약할 수 있다. 그밖에 주차장 예약, 도심 주차대행, 손 세차, 대리운전 호출 등 차량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앞서 4월에는 파주직영 운정드림 주유소에 처음으로 전기차(EV) 충전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으로 주요 거점 소재 계열주유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메타버스 주도” 삼성, 美 스타트업에 ‘베틱’

VR·AR 콘텐츠 제작 기술 투자
‘텔레포탈’ 모집 시드 라운드 참여

삼성전자가 ‘메타버스(Metaverse·초월과 현실 세계의 합성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섰다.

5일 삼성넥스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텔레포탈(Teleportal)’이 모집한 170만 달러(약 19억 원) 규모의 시드(Seed) 라운드에 참여했다. 삼성넥스트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투자 전문 자회사다.

초기 투자 개념인 시드 라운드라 삼성넥스트의 이번 투자액이 크진 않지만,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콘텐츠 분야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는 분석이다.

삼성넥스트가 투자한 텔레포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017년 설립됐으며, 개발자 및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 스타트업이다. 직관적인 3D 인터페이스를 갖춘 지능형 도구 등을 통해 각종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관련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공간 컴퓨팅은 메타버스를 구현하게끔 하는 넓은 의미의 컴퓨팅 기술을 총칭한다. 즉 현실 세계에서 필요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를 불러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공간 디스플레이가 되는 셈이다. 공간을 디스플레이로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는 ‘AR 글라스’와 ‘VR 헤드셋’ 등을 꼽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새로운 VR 헤드셋(가칭 갤럭시 VR)을 출시할 전망이다. 애플 역시 내년 2분기 최초 ‘A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는 최근 글로벌 IT·전자 업계의 대세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메타버스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있다. IT·통신·하드웨어·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한편, 삼성전자는 국내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C랩(C-Lab) 아웃사이드’ 공모전을 통해 AI(인공지능), AR·VR·XR(확장현실), 로보틱스 등 9개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모집 중이다. 송영록 기자 syr@



안전·편의 사양 강화 ‘The 2022 레이’ 출시

승용 1355만원·밴 1275만원부터

기아가 안전·편의 사양을 강화한 ‘The 2022 레이’(사진)를 5일 출시했다.

The 2022 레이에는 새로운 기아 엠블럼을 적용하고,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트 벨트 리마인더(SBR)를 전 좌석에 기본 장착했다.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는 기존 선택

사양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차량·보행자)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기술을 묶은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를 기본 적용해 주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4.2인치 칼라 TFT LCD 클러스터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러기지 네트(화물 고정용 그물망) △뒷좌석 플로어 언더트레이(뒷좌석 하단 수납공

간) 등 편의 사양과 디자인 요소를 기본 채택했다.

레이 밴은 기존 선택 사양으로 운영한 동승석 에어백을 전 트림에 기본 제공해 안전성을 높였다.

판매 가격은 승용이 1355만~1580만원, 밴은 1275만~1360만원이다. 한편 기아는 차박 트렌드를 반영해 캠핑·차박용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7월 중 기아멤버스 온라인포인트를 ‘카앤라이프’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한화큐셀 ‘제로 에너지 홈’ 구축 맞손

미·유럽 시장 공략 협력 확대

삼성전자와 한화큐셀은 2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에서 ‘제로 에너지 홈(Zero Energy Home)’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에너지의 생산, 저장, 사용, 관리가 통합된 종합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로 에너지 홈이란 가정에서 직접 생산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에너지 독립을 실현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주로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Active) 기술’과 에너지 손실



김희철(왼쪽) 한화큐셀 사장과 이재승 삼성전자가 2일 ‘제로 에너지 홈’ MOU를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큐셀

을 최소화하는 기기와 자재를 활용한 ‘패시브(Passive) 기술’이 쓰인다.

한화큐셀은 가정용 태양광 모듈과 에

너지 저장 장치(ESS)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한다. 자체 에너지 관리 플랫폼 커넥트(Q.ONNECT)로 발전량, 충전량, 총 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관리한다.

삼성전자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 플랫폼에서 EHS(Eco Heating System) 히트펌프와 각종 가전제품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사는 국내외 실증 사업은 물론, 가정용 에너지 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동 영업 등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삼성전자, 메모리·가전사업부 성과급 100%

삼성전자가 성과급 개념의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을 확정했다.

올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한 메모리 반도체와 소비자가전 소속 직원들은 최대 수준인 기본급 10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삼성전자는 5일 사내망을 통해 DS(디바이스솔루션), CE(소비자가전), IM(IT·모바일) 등 사업부문별로 올해 상반기 TAI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매년 상·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차등 지급하며, 최대치는 월 기본급의 100%다.

DS부문 메모리 사업부, CE부문 생활가전,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IM부문 네트워크 사업부는 각각 기본급의 100%를 인센티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장 섯다운으로 실적이 감소한

DS부문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와 시스템LSI 사업부, IM부문 무선사업부는 75%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지된 TAI는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초과이익성 과급(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과 TAI로 구성된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1년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어섰을 때 초과이익의 20% 한도 안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것이다.

SK하이닉스도 이날 임직원들에게 2021년 상반기분 PI를 기본급 100%로 9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PI(Productivity Incentive)는 반기별 생산성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현대차 “미래 유니콘 기업 찾아요”

‘제로원 엑셀러레이터’ 모집

현대자동차그룹은 오픈이노베이션플랫폼 ‘제로원 엑셀러레이터’의 2021년 하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제로원 엑셀러레이터’는 현대차그룹 현업 팀이 발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 협업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다양한 혁신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 및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로원 엑셀러레이터는 △모빌리티 & 물류 5건 △친환경 6건 △사용자 경험 7건 △비전 AI 6건 △데이터 분석 5건 △소재 7건 △드론&로봇 4건 △콘텐츠 4건 △기타 1건 등 기술 분야에 따라 9가지 테마로 나눠 총 45건의 프로젝트에서 모집을 진행한다. 지원 시점에 법인 설립이 완료된 스타트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고 접수

는 29일까지 총 4주간 ‘제로원 엑셀러레이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된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최대 5000만 원의 프로젝트 개발비 지원과 제로원 엑셀러레이터의 지분 투자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다.

2018년에 시작한 제로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현대차그룹 내 9개 그룹사 60개 팀과 스타트업 73개 사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까지 64건의 협업 프로젝트와 39개 사를 대상으로 지분 투자를 집행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유창욱 기자 woogi@

〈메르세데스-벤츠 S 580 4MATIC〉

수입차 10대 중 7대 독일차… 2억 넘는 벤츠 S도 ‘불티’

상반기 판매 14.7만대 최대

고급차 선호·개소세 인하 영향
벤츠 4.2만대·BMW 3.6만대
베스트셀링카 ‘벤츠 E 클래스’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이 15만대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6월에는 2억 원 넘는 메르세데스-벤츠 S 580 4MATIC이 판매량 2위에 이름을 올리는 진기록을 보여줬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입 승용차 누적 판매량은 14만7757대로 전년보다 15.2% 증가했다. KAIDA 집계가 시작된 이래 상반기 판매량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은 2015년 처음으로 11만대 선을 넘은 뒤 줄곧 10만대 이상을 유지했다. 2018년 판매량이 14만109대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4만대를 웃돌았지만, 올해처럼 15만대에 육박하는 실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이 올해 들어 완전변경 모델을 연이어 선보였고,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영업을 정상화하며 신차를 대거 투입한 점이 전체 수입차 판매량을 끌어올렸다. 소비자의 고급차 선호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수입차 시장 흥행에 한몫했다.

브랜드별 상반기 판매량은 메르세데스-벤츠가 4만2170대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2위는 3만6261대를 판매한 BMW가, 3위는 1만798대를 판매한 아우디가 차지했다. BMW와 아우디 모두 전년 대비 판매량이 42.6%, 7.2% 늘었다. 4위는 폭스바겐(8752대), 5위는 볼보(7629대), 6위는 미니(6174대)로 나란히 10% 넘는 판매 성장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사진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률을 보였다.

상반기 판매된 수입차 10대 중 8대는 유럽 모델이었다. 유럽 브랜드는 12만1020대 팔리며 전체 수입차 시장의 81.9%를 차지했다. 지난해(78.8%)보다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특히, 독일 브랜드 판매량이 10만대를 넘어서며 69%의 점유율을 보였다.

연료별로는 디젤 모델의 판매 감소세가 뚜렷했다. 디젤 모델은 상반기에 2만대 넘게 팔렸지만, 전년보다는 판매가 38% 줄었다. 반면,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197%, 323% 급증했다. 전기차(BEV) 판매량도 66% 늘었다.

상반기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 클래스였다. 6개월간 1만4733대가 팔렸다. E 250과 E 350 4MATIC이 트림별 판매량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2위는 BMW 5시리즈(1만823대), 3위는 아우디 A6(5556대)로 나타났다.

6월 판매량은 전년보다 4.2% 소폭 감소한 2만6191대로 나타났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는 폭스바겐 티록 2.0 TDI(1029대)가 선정됐다. 1월 출시된 콤팩트 SUV 티록은 3000만 원대라는 가격

과 뛰어난 상품성을 앞세워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

특히 가격이 2억 원을 웃도는 럭셔리 세단 메르세데스-벤츠 S 580 4MATIC은 판매량 2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한 달간 965대가 판매됐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출고를 기다리는 고객이 많아 초기 실적이 흥행을 보였다”라며 “이전 모델 대비 흥행의 여부는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성 가속

초고속 충전소 ‘을지로 센터원 E-pit’ 구축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을지로 센터원 E-pit’〈사진〉을 구축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을지로 센터원 E-pit는 현대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협업해 마련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로, 각종 업무 및 상업시설이 밀집해 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서울 강북 한복판에 설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pit은 전기차 충전과 연관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현대차그룹의 초고속 충전 브랜드다.

미래에셋 센터원 지하 2층에 마련된



을지로 센터원 E-pit에는 최대 260kW까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4기와 100kW까지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2기가 설치됐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타사 전기차 이용 고객에게도 E-pit 충전소를 개방한다. 국내 충전표준인 콤보1을 기본 충전방식으로 채택한 전기차는 제조사에 상관없이 모두 충전할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롯데케미칼, 여수·대산공장 원료 설비 효율화

대기오염 배출 감소 1400억 투자
내년까지 LPG 사용 비중 2배 ↑

롯데케미칼은 1400억 원을 투자해 여수·대산공장의 원료 설비를 효율화한다고 5일 밝혔다.

에틸렌 생산 원료인 납사(Naphtha)의 비중을 줄이고 LPG(액화석유가스) 사용량을 늘리는 작업이다. 현재 20%인 국내 에틸렌 생산설비의 LPG 사용 비중을 내년 말까지 약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에틸렌 설비 능력에 따라 최대 50%까지 원료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에틸렌 생산의 주원료인

납사 대신 경쟁력 높은 LPG의 사용량을 늘려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원료 시황에 따른 선택적 투입으로 효율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유가 급등락에 따른 원가 절감과 이산화탄소 저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 등을 위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생산 공정에 납사 대신 LPG를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5월 중순부터 간이 보수를 통해 설비 추가를 위한 사전 공사를 마쳤다. 여수와 대산공장은 LPG 설비 외에도 대기오염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공사를 추가로 진행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배출물도 줄일 계획이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CJ대한통운, 블록체인 기반 의약품류 고도화

업계 첫 ‘PLS’ 시스템 개발 착수

CJ대한통운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안성 높은 시스템을 개발해 기존의 의약품 물류 서비스를 한층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업계 최초로 의약품물류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PLS(Pharmaceutical Logistics System)’ 개발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의약품 유통과정

데이터의 위변조, 해킹을 원천 차단한다. 또 입출고, 보관, 배송 등의 물류 데이터를 PLS에 연동시킴으로써 물류 품질에 대한 제약 고객사 및 국민 신뢰도를 높인다. 향후 데이터 구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11월에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현재 경기도 동탄에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인증을 획득한 제약허브센터를 두고 전국 11개의 의약품 전담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Belleville3Hands

Time is our tradition

1924년 탄생한 정통 스위스 독립 시계 브랜드, 그로바나(GROVANA)는 스위스 테니켄(Tenniken)의 자체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elleville 3hands
STEEL CASE
1765.1594
41.5 mm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5G 지고 LTE 댔다고?” 가입자 수 ‘통계의 함정’

고객 감소세 LTE 올해 첫 반등
알뜰폰 선불제 분류 세분화로
4G 가입자 수 증가 ‘착시효과’
5G 불만에 LTE 회귀 가능성도

5세대(G) 이동 통신 사용자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LTE(4G)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알뜰폰) 선불 요금제 가입자 수가 제 자리를 찾으면서 ‘통계의 함정’이 발생한 결과다.

다만 일각에서는 5G 이용자가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 만큼 4G로 회귀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발표한 5월 기술방식별 회선 현황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1584만1478명으로 전월(1514만7284명) 대비 4.58% 늘었다.

반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4G 이용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반등했다. 5월 4G 회선 가입자는 5116만9843명으로 전월(5092만392명) 대비 0.49% 늘었다. 3월(-0.49%), 4월(-0.51%) 등 1월부터 매월 비슷한 폭으로 줄어들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알뜰폰 선불 요금제 가입자 분류가 바뀌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과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선불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네트워

크 세대별 분류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SKT 망을 통해 알뜰폰 선불 요금제를 이용하던 3G와 LTE, 5G 가입자를 통계상 편의를 위해 모두 3G MVNO 가입자로 분류했다. 반면 5월 통계부터는 세대별로 이용자를 구분해 더욱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됐다.

3G 알뜰폰으로 묶여 있던 숫자가 제 자리를 찾으면서 통계도 변했다. 숫자를 보면 3G MVNO 가입자는 5월 167만6112명으로 전월(236만4387명) 대비 69만 명 가량 줄었다. 이들 중 대부분이 SKT 망을 사용하는 선불 알뜰폰 가입자로 파악된다.

SKT 관계자는 “60만여 명 정도 통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빠져

나간 인원 대부분이 새 분류를 적용받게 된 셈이다.

이에 따르면 4G 알뜰폰 가입자 수는 약 78만 명 늘어난 반면 5G 알뜰폰 가입자는 3만6949명으로 4월 7000명대에서 급격히 뛰어올랐다. 알뜰폰 전체 가입자 수와 비교해도 5G 가입자 수가 이상할 만치 높다.

SKT 관계자는 “통계 분류가 바뀌면서 더욱 정확한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5G 이용자가 LTE로 빠져나갔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기정통부 측은 “기존 통계방식을 적용할 경우, LTE 가입자는 35만명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5G 이용자가 LTE로 옮겨가는 경

우도 속속 목격되는 만큼 5G 망 확충에의 필요성은 커질 전망이다. 이용자들이 5G의 실제 효과를 아직도 누리지 못한 만큼 LTE로의 회귀가 현실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자급제폰을 이용하며 5G 요금 약정이 끝나자마자 LTE 요금제로 변경했다는 이모(28) 씨는 “요금은 비싼데 정작 5G가 터지는 곳은 많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5G 기지국 확충도 관건이다. 속도가 LTE의 20배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진 28㎐(㎐) 대역 5G 기지국 숫자는 3월 말까지 91국에 그친다. 올해 안에 4만 국 이상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고려하면 보급 속도가 느리다.

이다원 기자 leedw@



5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中企 “경영 어렵다, 최저임금 동결” 촉구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주휴 수당 포함 땀 시급 1만원 넘어”

중소기업계가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ILO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29개국중 6위로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1

만 원을 넘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으로 결국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며 “조사에 의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으며, 40.2%가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

지표 회복을 이유로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는 “지금도 10개 중 4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중소기업계도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한샘 “저금리 대출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나은행과 대출 서비스 협력

수천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를 저리의 은행 대출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홈 리모델링 상품을 제1금융권인 하나은행의 금융 대출로 구매할 수 있는 ‘하나 인테리어 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보통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적게는 2000만 원대부터, 많게는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대다수 소비자는 리모델링 비용을 현금이나 높은 이자의 카드 할부로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목돈 마련과 높은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제1금융권을 통한 금융 대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리모델링 공사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99㎡(30평형)대의 보통 아파트에 한샘 ‘밀란(Milan)’ 그레이드로 부



엿과 욕실 2개를 고칠 때, 약 1000만 원의 공사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비용 전액을 60개월 동안 1000만 원 대출 금액대의 최저 금리 3.1%를 적용한 ‘하나 인테리어 대출’로 구매할 경우, 매월 약 18만 원대의 비용으로 부엌, 욕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하나 인테리어 대출’ 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모바일) 대출로 이뤄진다. 재직 기간이 2년 이상 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 영위 기간이 2년 이상 된 개인사업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 소유자(소유예정 및 공동소유 포함)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한도확인, 계약 증빙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한샘 리모델링 상품 금액에 맞춰 가능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고객의 신용평점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우대조건에 따라 최저 2% 중반대의 저리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금리는대출금액 및 대출 기간과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또, 개인별 신용대출 한도와는 별도로 대출할 수 있으며, 한도는 서울보증보험 자체 심사 및 ‘DSR 규제(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적용에 한도가 결정되고, 서울보증보험 담보 100%로 진행된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과기부 ‘28㎐ 살리기’ 교육지책 지하철 2호선 ‘와이파이 서비스’

IT 정책 돋보기

28㎐ 지원 단말 없어 와이파이로
“트래픽 높은 지하철 체감효과↑”

이르면 내달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 구간(신설동~성수역)에서 28㎐ 5G를 근거리무선통신(와이파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동사가 28㎐대역의 마땅한 수요처를 찾기 힘들어하는 가운데 굳이 ‘지하철’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28㎐ 대역 5G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안 중 하나로 과기정통부와 이동사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 구간에서 28㎐ 5G 기반 와이파이 백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하철 2호선 신설동~성수역 5.4km 지선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주파수는 SK텔레콤(SKT)이 할당받은 28㎐ 대역(28.1~28.9㎐) 800㎐ 폭을 활용한다. 공사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예정돼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마 등 영향으로 일정 부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하철에 설치된 와이파이 백홀은 LTE다. 여기에 28㎐ 5G 와이파이를 설치되면 해당 구간에서 와이파이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 5G 속도만큼은 아니겠지만, 현재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게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지하철에 간 5G 망은 3.5㎐ 주파수대역을 이용해 현재도 개통이 안 된 곳이 많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올해 5월 말 기준 구축률은 82.2%로 나타났으나 개통률은 이보다 떨어진다. 특히 공항철도·서해선·신분당선은 구축 공사를 시작하긴 했으나 개통한 역은 0곳이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평가부터 지하철 전 노선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했는데도 개통이 미진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전국 지하철역에서 5G가 개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하철 내 5G 자체도 갈 길이 먼데 과기정통부가 2호선 지선 구간에 28㎐ 5G 기반 와이파이 백홀 서비스를 실증기로 한 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 번째는 트래픽 발생 비중이 높아서다. 지하철은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곳이다. 이 때문에 실증 사업을 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효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28㎐ 주파수의 특성이다. 28㎐ 주파수 대역은 6㎐ 이하 중대역과 비교해 전파의 직진성이 강해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최대 속도는 20Gbps(초당 기가비트)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알려졌다. 다만, 전파의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약해 도달 거리가 짧다.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하는 이유이며, 이 같은 특징 탓에 통신사가 투자를 어려워하고 있다.

지하철 내 터널은 도달 거리가 짧은 28㎐를 활용하기 적합한 환경이다. 전파 효과가 터널에서 갇히는 효과가 있어서다.

와이파이 백홀 서비스로 구축한 배경은 더 많은 소비자의 효용을 위해서도 있지만, 5G 28㎐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부재한 이유도 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중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없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내에 출시되는 5G 스마트폰에 28㎐ 대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테나는 빠질 것으로 전망한다. 28㎐ 대역 지원은 단말 제조사와 통신사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데 삼성전자 갤럭시S21 FE, 갤럭시Z폴드3·갤럭시Z폴드3 등 단말에도 5G 28㎐ 대역을 지원하는 안테나가 탑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28㎐ 5G 단말기 부재에 따른 한계가 실증 사업에도 나타나는 셈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상용화는 일반적으로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28㎐는 이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부터 없어 상용화 단계가 아닌 것”이라며 “이번에 과기정통부와 하는 28㎐ 5G 서비스도 시범, 실증 사업인 이유”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수서역 ‘찐’한 신세계… 백화점 넘버2의 ‘동남권 大戰’

매출 2위 점포 롯데 잠실·현대 무역센터점과 상권 겹쳐
소비력 높은 주거 밀집지역… 백화점 빅3 자존심 대결

신세계가 2027년 수서역에 초대형 점포를 내기로 하면서 백화점 빅3의 2위 점포끼리 한판 승부를 펼친다. 서울 동남권에는 공교롭게도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 주요 백화점의 매출 2위 점포들이 몰려 있다. 신세계는 SRT 및 GTX-A가 정착하는 수서역 점포로 동남권 석권에 나선다는 각오다.

◇라이벌은 현대 무역점·롯데 잠실점=신세계백화점은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2027년 점포를 오픈하면서 서울·수도권 동남부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고 5일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이 완성되면 SRT 수서역 일원은 수도권 동남부 대중교통 및 고속철도의 지역 거점은 물론, 초대형 유통 상업 허브로 떠오를 전망이다. 영업면적은 약 8만3000여㎡(약 2만

5000평)로 서울 내 최대 규모인 현대백화점의 더현대서울(2만7000평·8만9100㎡)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맞먹는 매머드급 점포다. 차정호 신세계백화점 사장은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동남부의 핵심 상권이 될 만한 잠재력이 매우 큰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수서역점은 8월 오픈 예정인 대전신세계 엑스포점에 이은 6년 만의 도전이 된다. 경쟁 점포로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지목된다. 공교롭게도 이들 점포는 각 백화점의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신세계 수서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3km 떨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다. 지난해 롯데백화점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조감도.

점포 매출 1위는 1조4768억 원을 거둔 본점으로 잠실점은 1조4725억 원으로 본점과 미세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수서역과 5km 채 되지 않은 거리에는 현대백화점의 무역센터점이 있다. 코엑스몰과 도심공항터미널과 연결된 무역센터점은 지난해 8841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1조 클럽에 가입한 판교점에 이은 2번째로

매출이 높다.

◇롯데·현대 따돌린 대구점의 추억=신세계가 수서역을 제2의 강남점으로 낙점한 것은 소비력이 높은 주거 밀집 단지가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점이 꼽힌다.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대치동, 도곡동 등 아파트 밀집지 인근에다 신흥 부촌인 잠실과도 가깝다. 서울 송파구와 성남, 하남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와도 가장 가까운 백화점 중 하나가 된다.

최근 교통 중심지 점포의 흥행도 바탕이 됐다. 서울 반포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과 함께 있는 강남점의 경우 롯데백화점 본점을 제치고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내 백화점 매출 1위 점포를 기록했다. 국내 최초로 매출 2조 원을 2년 연속 기록한 점포이기도 하다.

2016년 동대구역사에 오픈한 대구점도 좋은 추억이다. 롯데와 현대에 비해 지역 후발 주자지만 대구점을 선보인 3년 만에 대구 유일 공식 플래그 매장을 롯데 대구

점에서 뺏아오더니 지난해 말에는 에르메스 부티크 매장으로 현대 대구점에서 신세계로 이동했다. 올해 3월엔 샤넬도 신세계 대구점에 오픈하면서 명품 빅3를 모두 갖춘 전국 8개 백화점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에는 6683억 원의 총매출로 백화점 전국 톱 10 점포에 이름을 올렸고, 작년에는 7891억 원으로 더 뛰었다. 이에 비해 2016년 6720억 원이던 현대 대구점 매출은 지난해 5995억 원대까지 뒷걸음질쳤고, 롯데 대구점의 매출도 3962억 원에서 2226억 원으로 줄었다. 신세계의 대구 진출 4년 후인 지난해엔 향토 백화점인 동아백화점이, 올 7월에는 대구백화점 본점이 휴업하기로 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서울 동남권은 구매력 높은 부유층이 많이 거주해 백화점들이 노리는 곳”이라면서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을 거점으로 삼으면 상권 범위가 수십 km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장어·랍스터·인삼… 유통업계 ‘복날=삼계탕’ 공식 깬다

CU 한우구이 등 보양식 30종
CJ온스타일 활전복·곰탕 다양

초복(11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는 24절기 상 소서와 대서 사이에 자리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로 여겨진다. 유통업계는 복날 보양식의 종류를 늘려 ‘복날 보양식=삼계탕’이라는 공식을 깨는 동시에 조리 간편성을 강화해 집에서든 편하게 보양식을 즐길 것을 제안한다.

CU는 다가오는 복날을 맞아 언택트로 선물할 수 있는 한우, 장어, 랍스터 등 프리미엄 보양식과 싱글족들을 위한 간편 보양식 총 30여 종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사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춘 건강한 복날 나기를 위해 만나기 어려운 가족과 지인들에게 쉽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날 선물세트를 구성해 구매 채널을 모바일로 확대하는 한편, 각자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1인 간편식까지 폭넓게 기획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U가 이번에 준비한 복날 선물세트는 총 12종이다. CU는 1등급 한우구이

세트(9만9000원)부터 민물장어(4만6000원), 항공직송 활랍스터(5만8000원), 노화도 활전복세트(6만5000원), 만인산 금산인삼(4만5000원) 등을 준비해 ‘복날=삼계탕’이라는 공식을 깬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계탕 3종(각 2마리, 1만7000~1만7900원), 옛날통닭&고추통닭(4마리, 2만5900원), 당도선별수박(2만3900원) 등 대표적인 여름 상품들도 구매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보양 간편식 ‘통째로 닭다리국수’를 출시했으며, 용량별로 구분한 수박 5개 제품도 판매한다. 이달 중에 삼계탕, 닭가슴살 등 닭 관련 14개 상품을 농협카드나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30% 할인해주는 ‘계(鷄)이득 프로모션’도 한다.

이마트24는 9일 ‘복날엔 민물장어덮밥’을 시즌 한정상품으로 선보인다. 이달 말까지 동원 브랜드의 삼계탕과 닭곰탕 상품을 반값에, 동원의닭죽·삼계전복죽·들깨닭죽 등을 각각 1+1로 판매한다.

CJ온스타일은 TV라이브·T커머스·모바일 전 채널을 활용해 보양 간편식(HMR) 상품을 확대한다. 전통의 보양



식 강자 삼계탕, 갈비탕부터 완도 활전복, 호텔 레스토랑 간편식 등도 준비해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TV라이브에서는 이열치열 깊고 진한 국물로 기력을 충전할 수 있는 보양식을 준비했다. 5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하는 ‘사대부집 곳간 녹두 삼계탕’은 국내산 닭에 금산 수삼 한 뿌리와 녹두까지 넣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6팩 구성에 4만6900원이다. 9일엔 93년 전통의 노포(老鋪) ‘역전회관 명가 갈비탕’을 방송한다. 국내산 파뿌리, 생강을 넣은 깔끔하고 담백한 육수에 100% 소 갈비살만 사용했다.

T커머스 채널 CJ온스타일 플러스에서는 보양 수산물 ‘완도 활전복’을 만나볼 수 있다. 완도에서 신선하고 질 좋은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란 이 상품은 8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한다. 활어 상태로 배송되며 가장 큰 사이즈 전복 20미 구성을 6만900원에 판매한다.

CJ온스타일 모바일 식품관 ‘맛있는가(家)’는 유명 맛집 음식을 선보이는 고메(GOURMET) 프리미엄 보양식으로 ‘워커힐 명월관 갈비탕’과 ‘워커힐 곰탕’을 내놔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뷔페 레스토랑 ‘그랜드 키친’은 올 7~8월 두 달간 30년 경력의 이성호 요리기능장이 선보이는 특별한 여름 보양식을 선보인다.

11일 초복 당일에는 간pong 장어, 망고수박 등 각 색섀별 여름 스페셜 보양메뉴를 추가로 선보이며, 21일인 중복과 다음 달 10일 말복에는 고객 테이블로 장어구이를 개별 서비스할 예정이다.

30년 경력의 한식 전문 셰프인 이성호 요리기능장은 베트남,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초청받아 한식을 널리 알린 바 있다. 그는 이번 여름 보양 메뉴로 궁중 보양식인 임자수탕을 비롯해 한방 오리 백숙, 장어탕, 전복 영양밥을 직접 준비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hy ‘야쿠르트 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인증

hy는 국내 최초 발효유 ‘야쿠르트 라이트(이하 야쿠르트)’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인증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hy는 이번 인증이 분말형 제품에 한정됐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y가 보유한 액상형 프로바이오틱스는 기존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난다.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함께 주요 기능성을 표시한다.

제품에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2종(HY2782, HY7712)이 함유돼 있다. HY2782는 hy만의 독자적 장기배양기술을 적용해 장내 생존율을 높다. 65mL 제품 1개당 100억 CFU를 보증한다. 생균 상태로 프레스 매니저가 배송비 없이 전달한다. 합리적 가격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정기구독해 먹을 수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브라질 ‘감마’ 변이 효능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의 브라질 ‘감마’ 변이 바이러스(P.2)에 대한 동물효능시험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브라질 ‘감마’ 변이에 대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실험용 쥐 55마리를 대상으로 렉키로나를 투입한 결과, 약물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바이러스 역가가 크게 감소하고, 체중 감소 방어 효과 등 임상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사람 치료 용량 대비 낮은 용량 투여 시에도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입증됐고, 실험용 쥐의 경우 생존율에서도 렉키로나 투여군 생존율은 100%인 반면 대조군 생존율은 0%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각종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렉키로나의 세포수준 중화능 및 동물효능시험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인도발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이달 내 동물효능시험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렉키로나의 치료효과가 동물시험을 통해 속속 입증되고 있다”라며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긍정적 동물시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수박 누른 여름 과일 새 왕좌에

롯데마트, 신비복숭아도 인기

복숭아가 수박을 누르고 여름 과일의 새로운 왕좌에 등극했다. 롯데마트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복숭아 수요가 늘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복숭아 수요 증가의 이유로 10kg 내외인 수박이 3~4인 가족이 즐기기에 적합하다면, 복숭아는 크기가 작아 혼자 먹기에 간편하단 점을 꼽았다. 지난해 7~8월 두 달간 롯데마트 매출 집계 결과 여름시즌 과일 판매 1위는 복숭아였고, 판매량은 수박보다 46% 높았다. 올해 6월 복숭아 매출 역시 전년 대비 30% 신장했다.

‘신비 복숭아’, ‘납작 복숭아’ 등 이색 복숭아도 인기를 누렸다. 실제로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신비 천도복숭아(800g/팩)’ 매출은 지난달 기준 전년보다 80%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소비자들에게 제철 고품질 복숭아를 선보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가장 맛있는 시기에 적절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 조절에 힘쓰고, 다양한 품종의 복숭아를 출시할 계획이다.

올여름에도 소비자들 사이 시계별로 다양한 복숭아를 즐길 수 있도록 이달 둘째 주에는 ‘천 봉 엑셀라 복숭아’, 다음 달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각각 ‘거반도 납작 복숭아’와 ‘괴산 대항금복숭아’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송하숙 과일 MD는 “1인 가구 증가 트렌드 및 이색 품종 과일에 대한 열풍으로 복숭아가 여름 대표 과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지 확대, 다양한 품종 도입을 통해 상품성을 한층 강화한 제철 과일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손흥민 기념메달’

현대백화점은 5일부터 18일까지 더현대닷컴과 현대홈쇼핑을 통해 한국조폐공사 ‘손흥민 기념메달’을 판매한다. ‘손흥민 기념메달’은 원형과 지폐형 두 종류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 총 4종으로 구성돼 있다.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은 개당 △원형 금메달(순도 99.9%, 중량 31.1g, 직경 40mm) 352만 원 △원형 은메달(순도 99.9%, 중량 31.1g, 직경 40mm) 19만 8000원 △지폐형 금메달(순도 99.9%, 중량 20.0g, 가로×세로 68×154mm) 259만 원 △지폐형 은메달(순도 99.9%, 중량 10.0g, 68×154mm) 11만 원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국제 유가, 거침없는 하이킥… 덩달아 뛰는 원유ETF

WTI 가격 배럴당 75.16달러… 지난해 저점 대비 110% 급등
수익률 폭락에 내리막길 걷던 원유투자상품 흑자전환 ‘대반전’
“투자 쏠림 현상·위험 대비 수익률 낮아 장기 투자는 신중해야”

직장인 A씨(36)는 지난해 10월 중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39달러대로 급락하자 바닥이라고 판단해 유가 상장지수펀드(ETF)에 3000만 원을 투자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75달러에 육박했다는 소식에 증권 계좌를 확인한 A씨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A씨가 투자한 이후 유가가 90% 이상 급등하자 ETF 수익률도 덩달아 뛰었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원유 투자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관련 상품의 수익률은 55~71%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일(현지 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7센트(0.1%) 하락한 배럴당 75.16달러를 기록했다. WTI 가격은 지난해 35.70(10월 30일)달러를 저점으로

로 110% 급등했다.

원유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ETN의 수익률도 급등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2일 기준), 올해 들어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H)은 71.48% 급증했다. 최근 1년으로 기간을 넓혀보면 수익률은 88.96%로 뛰었다.

KODEX WTI원유선물(H) 역시 강세를 달렸다. 올 상반기 수익률은 55.30%로 최근 1년간 수익률은 77.56%에 달한다.

이들 상품의 지난해 연간 수익률이 각각 -40%, -66.1%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급반전’인 셈이다. TIGER 원유선물Enhanced(H) 역시 올해 들어 55.5% 수익률을 기록했다.

원유 투자 상품은 지난해 수익률 폭락으로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18년 만에 배럴당 20달러를 밑돌 만큼 곤두박질친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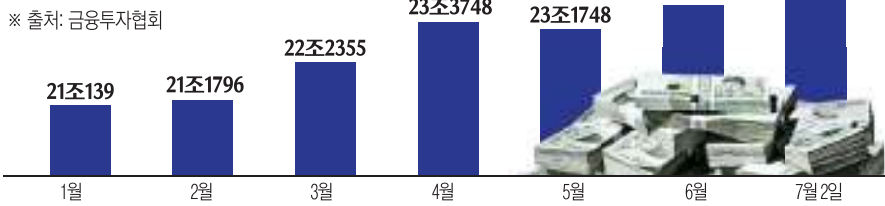
일부 ETN 주가는 90% 넘게 하락했고 ‘깡통’이 된 주식 계좌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을 저점으로 유가가 반등하며 원유 상품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수익률이 오르자 차익실현 물량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KODEX WTI원유선물(H)을 최근 한 달간 168억 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TIGER원유선물Enhanced(H)와 KBSTAR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H)도 각각 108억 원, 53억 원씩 판 것으로 집계됐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진행된 OPEC+ 회의에서 산유국 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만큼 이번주에도 OPEC+ 산유국 회의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협상 결렬에 증산 합의에도 실패한다면, 유가는 급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투자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유가 ETF 상품은 투자자가 지는 위험에 비해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은 데다 원유 선물 교체(롤오버) 비용까지 발생해 장기 투자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2021년 상반기 신용거래용자 잔고 추이
(단위: 억 원, 월말 기준)



‘빚투’ 열풍에 신용거래잔액 24兆 돌파

올 상반기 코스피 상승세 타고
1년 3개월 만에 4배 가량 급등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에 신용거래용자잔액이 24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증시의 신용거래용자잔액은 24조30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일(1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24조 1816억 원)보다도 1207억 원 많은 수준이다.

신용거래용자잔액은 지난달 25일 23조 789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쓴데 이어 같은달 28일에도 23조8494억 원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운 바가 있다.

올해 초(19조2213억 원)와 비교해보면, 6개월 만에 4조9603억 원(25.8%)이 늘어난 수준이다.

신용거래용자잔액은 지난해 3월 신종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발 폭락장에서 연일 반데매매가 발생해 6조 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올 상반기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1년 3개월 만에 4배 가까이 몸집을 키운 것이다.

신용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종의 단기 차입 투자를 의미한다.

증시 호조에 신용거래가 급증하자 증권사들은 올해 들어 신용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시장에선 최근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신용거래 용자의 이자율도 오를 수 있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의 신용용자 금리는 6~9%(90일 기준) 수준으로 집계된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카카오페이, 증권에 3000억 쏟아

안정적인 신용용자 서비스 위해
단계적 유상증자 추가 출자 계획
‘메기효과’ vs ‘찾잔 속 태풍’ 갈려

카카오페이증권이 카카오페이로부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 수혈을 받는다.

투자나 자산관리 시장을 갈아먹으며 ‘메기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자본력이 핵심인 금융투자업계에서 ‘찾잔 속 태풍’에 그칠지 평가는 엇갈린다.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중 상장 계획을 밝혔다. 이번 상장에서 모집하는 자금은 희망 공모가 최하단 6만3000원 기준으로 1조609억 원이다.

이 중 3000억원을 카카오페이증권에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000억 원, 2000억 원을 증자할 계획이다.

증권은 내년부터 신용용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카카오페이와 연계한 수백만의 개인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신용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인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출자가 완료되면 증권사 자기자본 32위로 급상승하게 된다. 상상인증권, 리딩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에 앞선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 새로운 주식위탁매매 서비스 런칭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한 시스템 투자, 인력 확충,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위한 필요 라이선스 획득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이)중장기적으

로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 금융 사업자로의 도약 및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IB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3600만 명 넘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어떤 증권사도 갖지 못한 가입자라는 자산을 주식 서비스 사용자로 전환해 실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가 짧은 시간에 증권업계를 뒤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 투자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데, 경쟁사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수수료 경쟁도 포화 상태여서 카카오페이가 제공할 수 있는 ‘당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기영 기자 pgy@

카뱅 상장 앞두고 지분 보유사 웃는다

IPO로 투자사 몸값 오르면
보유지분 평가의 동반 상승

하반기 ‘IPO 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5일 카카오뱅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기준 최대주주는 카카오로 지분 31.62%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 다음으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6.97%, 국민은행이 9.30%, 한국금융지주가 4.65%씩 갖고 있다.

이어 넷마블,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등 각각 3.72%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24도 카카오뱅크 지분 1.39%를 갖고 있다.

이중 국내 증시에 상장된 곳은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넷마

블, 에스24 등이다. 통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기업공개 등을 통해 몸값이 올라가면, 투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평가이익도 증가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카카오뱅크 상장설이 시장에 퍼지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최대주주였던 한국금융지주다. 2019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카카오 지분 대부분을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긴 상태다.

8월 상장 후 당장 3분기부터 이익이 반영돼 수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후 3분기 지분법 처분이익으로만 약 4628억 원이 인식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추가 증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

내년에는 한국금융지주 세전이익에 약 9.8%를 기여할 전망이다”고 “예상 ROE(자기자본이익률)는 2021년 5.1%, 2022년 6.5%, 2023년 9.9% 수준이다”고 내다봤다.

지분 3.74% 보유한 넷마블도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넷마블이 투자한 쿠팡이, 하이브 등이 주가가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해 긍정적인 상태”라며 “지분율은 낮지만 카카오뱅크 상장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전체 공모 주식 수는 6545만 주, 주식 1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는 3만3000~3만9000원이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5조6783억~18조5289억 원 수준이다. 오는 21~22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된 뒤 같은 달 26~27일 일반 청약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은 오는 8월5일이다.

이인아 기자 lijh@

메리츠증권 ‘CFD 서비스’ 출시

외국계 증권사 중개 없어 업계 최저 매매수수료·이자율 제공

메리츠증권이 오는 9일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CFD란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 상품이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다른 증권사와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덕분에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환전비용을 내며 달러 증거금을 맡겨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으며, 업계 최저 수준의 매매수수료와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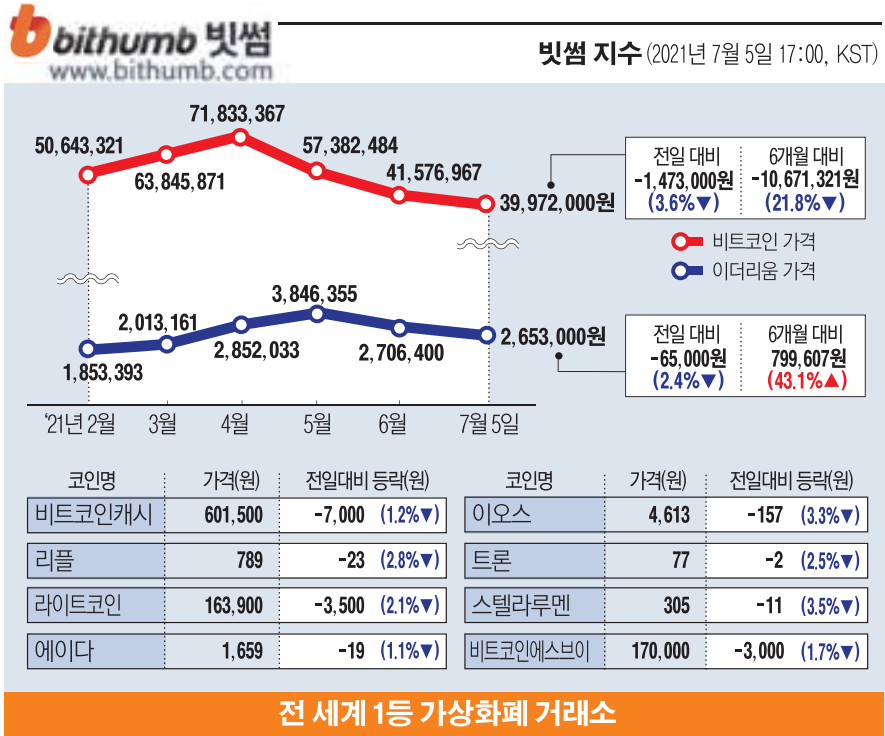
스마트폰 메리츠증권 앱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CFD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온라인 거래 시, 업계 최저 매매수수료인 0.10%가 적용된다.

기초자산인 주식에서 발행되는 배당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가 일정 부분 차감 후 지급하는 관행을 깨고 배당 전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 또한 장점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하면 국내주식 2500여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11%,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CFD는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레버리지와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하반기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너무 올랐나? 치솟던 세종시 집값 나홀로 ‘역주행’

전국 아파트값 동반 상승세... 17개 시·도 중 16곳 올라
세종시, -0.03% 6주 연속 하락 “단기 급등에 피로 누적”
내년 입주물량 감소·대선공약 등 집값 다시 자극할 수도

세종시 아파트값이 ‘나홀로’ 하락세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아파트값이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을 이어가는 상황에도 이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해 가격 급등 피로감과 늘어난 입주 아파트 물량,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등으로 맥없이 미끄러지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6월 28일 기준) 0.03% 내렸다. 전주(-0.02%)보다 더 커진 낙폭이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 5월 말 한 주 보합(0.0%)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6주 연속 하락세다.

집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올들어 지난주까지의 세종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2.7%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16.07%)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올해 전국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

(6.65%)과의 격차는 4%포인트(P)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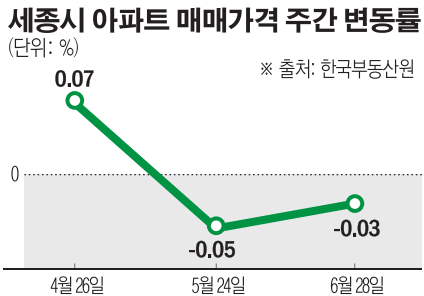
실제 아파트 매매 거래 사례에서도 집값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최고 9억 3000만 원에 거래됐던 세종시 새뽕마을 1단지 전용 84㎡형은 지난달 8억1000만 원에 팔리며 1억 원 넘게 미끄러졌다. 종촌동 가재마을 12단지 전용 84㎡형도 올해 초 8억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7억 2000만~7억775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최대 1억 원 넘게 집값이 떨어진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 최저 호가는 7억5000만 원 수준이다.

세종시 집값이 이처럼 역주행하는 건 지난해 나타난 역대급 상승장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값은 무려



세종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연합뉴스



44.93%(월별 변동률 누적 기준) 올랐다.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 7월 여당발(發) 행정수도 완성론이 집값 상승세에 불을 붙이면서 6월 2.55%였던 아파트값 상승률은 7월 6.53%, 8월 9.20% 급등했다.

광역적 도시와공간 대표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단기간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세종시 집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게 것도 매수세가 크게 약해진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세종시 아파트값 약세가 지속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충청권 표심을 모으기 위해 꺼내놓을 개발 공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세종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5600가구 수준이었던 세종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7668가구로 증가하지만 내년엔 다시 3058가구로 쪼그라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충청권에선 이미 너무 올라버린 세종시 집값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전으로 수요가 떨어져 나가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입주 물량 감소와 대선용 공약이 세종시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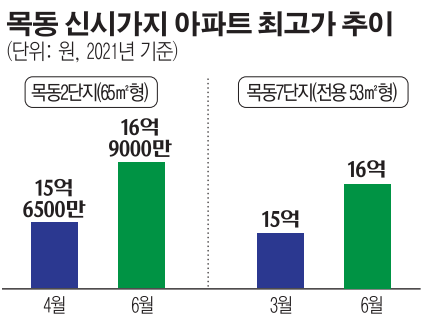
거래허가제에도 목동 아파트 ‘신고가 행진’

매매 3건 중 1건이 ‘신고가’ 기록
재건축 기대감에 매물 품귀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요건 강화’ 변수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매매가격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외려 희소성이 두드러져서다. 가을로 예정된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강화는 목동 주택시장 향방을 가을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매매 26건이 허가받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허가 신청 내역에 맞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목동에선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2만6629가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4개 단지 모두가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격이 들쭉였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에



선 지분 18㎡(주거지역 기준)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취득은 어려워졌지만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선 신고가 거래가 9건 신고됐다. 이 기간 신고된 아파트 매매세 건 중 한 건은 신고가 거래라는 뜻이다.

목동2단지 전용면적 65㎡형은 지난달 16억9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세웠다. 4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 거래(15억6500만 원)보다 1억2500만 원 올랐다. 목동7단지에서도 5월까지만 해도 15억 원이던 전용 53㎡형 최고가가 그보다 1억 원 높은 지난달 16억 원으로 갈

렸다.

목동 주택시장에선 여전한 재건축 기대감과 매물 품귀 현상을 가격 상승 이유로 든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고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는 게 이곳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은 ‘가물에 콩 나듯’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를 끼고선 집을 사고팔 수 없어서다. 목동 J공인 관계자는 “거래 가능한 물건이 귀해지니 가격은 저절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목동의 ‘정중동’ 집값 상승세는 9월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서울시는 안전진단만 통과해도 재건축 조합원 매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물건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사고 난 후에도 매매가 어려워진다. 목동 D공인 측은 “토지거래허가제보다 전매 규제 강화가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개요	
사업자 공모	인천시
사업지	청라국제도시
규모	26만1635㎡
공모 절차	7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내 사업 협약 체결

“3兆 청라의료타운 잡아라” 대형 건설사 ‘수주 각축전’

현대·롯데·GS건설 등 참여
대형병원들과 컨소시엄 구성
8일 우선협상자...연내 협약

청라의료복합타운 수주를 놓고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총 사업비가 3조 원에 달하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은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미래 부가가치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은 병원·금융사와 손을 잡고 인천으로 집결하고 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26만1635㎡ 규모 부지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업무·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종합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청라·검단 등 인천 서북부지역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8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5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했다.

각 컨소시엄에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빠지지 않고 있다. 공모에는 △아산병원 컨소시엄(서울아산병원·HDC현대산업개발·우미건설) △메리

츠화재컨소시엄(차병원·현대건설·롯데건설·금호건설)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인하대병원·GS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한화건설·호반건설·중흥토건) △한성재단 컨소시엄(세명기독병원·삼성물산·DL이앤씨) 등 5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건설사들은 의료복합타운 공사비에 더해 3000실에 이르는 오피스텔 분양으로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공모에서 사업부지 공급가격을 3.3㎡당 353만 원에서 248만 원으로 낮췄다. 이는 인근 토지 가격의 60%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

건설사들은 이번 사업에서 시공 실적을 쌓으면 향후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잇따르고 있다. 하반기에도 하남 진한경 힐링 문화복합단지과 팽택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타운 등이 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

인천경제청은 5개 병원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안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업자(400점), 사업 계획(600점) 등 1000점 만점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가산점(30점)이 별도로 주어진다.

이동욱 기자 toto@

경매도 ‘불장’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104.4% 역대 최고

서울 119%·인천 108.1%
매매시장 불안에 경매 인기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서울에선 경매에 나온 아파트의 97%가 감정가를 넘어선 가격에 팔렸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내놓은 ‘2021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총 1만 179건으로 이 중 411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입찰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40.4%, 낙찰가율은 79.9%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4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112.9%로 전월(111.0%) 대비 1.9%p 상승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3월부터 4개월 연속(112.0%→113.8%→115.9%→119.0%) 상승폭을 확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입찰이 진행된 45건의 물건 중 무려 44건인 97%가 감정가를 넘어서는 가격에 팔렸다. 평균 응찰자 수도 5.1명에서 8.9명으로 증가세가 이어갔다.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108.1%)도 전월 대비 1.4%p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이 이처럼 불장

(불처럼 뜨거운 상승장)을 보이는 건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 등 불안정한 매매시장에 부담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7.3명) 대비 24%가 증가한 9.1명을 기록했다.

이에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도 104.4%로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대전(95.4%)과 대구(112.1%)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각각 2.5%p, 4.9%p 올랐다. 반면 부산(107.3%), 광주(96.2%), 울산(101.7%)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옥상옥’ 우려 현실로… 공수처·檢 중복수사

수원지검에 이첩 요구했지만
檢 “공수처에 못 준다” 신경전

양측 결론 다르면 혼란 심화
행정·수사력 낭비 지적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전부터 제기됐던 검찰과의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협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으면 ‘옥상옥’ 구조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문흥성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당시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최모 검사(전 대검 검찰연구관) 등 현직 검사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상반기 대검 반부패부에서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재재이첩을 요청했으나 수원지검 수사팀이 몇 달간 수사를 진행해 이첩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두 기관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대검과 공수처는 최근까지 이첩 여부를 두고 공문을 주고 받았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비공개 자체 예규에 따라 사실상 이첩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은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이 사건은 공수처가 3월 이성운 서울고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함께 넘어갔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자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달라는 재재이첩 요구를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이 이첩 불가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고,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검도 결정을 보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쉽사리 공수처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게 되면 검찰은 앞으로도 공수처가 이첩한 사건을 수사 도중에 다시 넘겨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향후 이 사건을 둘러싸고 두 수사기관이 결론을 다르게 내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한쪽은 기소, 다른 쪽은 불기소로 결론을 내리면 공정성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며 “혐의제에서 즉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돌 맞은 ‘해피 판다’ 푸바오

7월 한 달간 ‘해피 판다 워크’를 진행한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아기판다 ‘푸바오’(福寶·행복을 주는 보물)의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해피 판다 워크’를 진행한다

적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수사 중인 사건을 계속 넘기게 될 수도 있어 이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사건 이첩에 대한 기준을 두 기관이 빨리 정리해 행정력과 수사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용 기자 deep@

경찰 ‘수산업자 금품제공 의혹’ 수사 속도

검사 등 4명 입건·소환 일정 조율… 박영수 “사실 아냐” 해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의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5일 김 씨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금품을 제공한 김 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참고인으로 1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월 3일 김 씨에 대한 최초 접보를 입수해 수사한 뒤 4월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금품 접대 의혹은 김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금품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입건자는 5월 초 처음으로 나왔다.

경찰은 금품 제공을 폭로한 김 씨가 수용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 부장검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 특검에게 제공했다. 김 씨는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해 보관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특검은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다”며 “그 회사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며칠간 렌트를 했으며 이를 후 차량은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 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관련 고발 사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 지사 조사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2030년부터 전면금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선별작업이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도권은 앞서 2026년부터 직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환경부는 특히 수도권 3개 시·도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이 80~90% 정도 감축하면 매립량은 10%에서 20%로 제한돼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300만 톤으로 이 중 25%인 75만 톤이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한다.

인천시가 2025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동근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Gary Armstrong
Philip Kotler
Marc Oliver Opresnik 지음
정연승·박철·이형재·조성도 옮김
600쪽 | 값 38,000원

마케팅의 아버지, 코틀러 교수의 최고의 마케팅 솔루션!

“돈 버는 기업들은 마케팅 계획이 다 있구나!”

세계적인
마케팅 입문서
Marketing: An Introduction
14판
번역서 출간

디지털 시대,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읽기 : 고객가치와 고객참여를 통한 관계 구축

고객감동을 실현한 기업에는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목차
PART 1 마케팅 정의 및 마케팅 프로세스 1 마케팅: 고객가치와 고객참여의 창출 2 기업전략과 마케팅전략: 고객참여, 가치, 관계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PART 2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 3 마케팅환경의 분석 4 마케팅정보의 관리: 고객통찰력 얻기 5 소비자와 기업구매자 행동의 이해
PART 3 고객가치지향적 전략과 믹스의 설계 6 고객가치지향적 마케팅전략: 표적고객을 위한 가치창출 7 제품, 서비스, 브랜딩 전략: 고객가치 구축 8 신제품 개발: 그리고 PLC의 관리
9 가격결정: 고객가치의 이해와 포착 10 마케팅 경로: 소비자 가치 전달 11 소매업과 도매업 12 고객참여와 고객가치 커뮤니케이션: 광고와 PR
13 인터랙티브와 판매촉진 14 다이렉트, 온라인, 소셜 미디어, 그리고 모바일 마케팅
PART 4 마케팅 영역의 확대 15 글로벌 마켓 16 지속가능한 마케팅: 사회적 책임과 윤리

교문사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16 | 전화 031-955-6111~4 | 팩스 031-955-0955 | genie@gyomoon.com

서울시, 긴급복지에 142억 투입... 작년 예산의 60%

1~5월 저소득 위기 가구·취약계층 10만8628가구 지원
사고·코로나 등 위기상황에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혜택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56) 씨는 올해 1월 질병으로 수술을 하고 총 289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됐다. 실비보험과 신용카드를 비용을 납부했지만 73만 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자녀는 채무불이행으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고 김 씨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 전전긍긍하던 김 씨는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을 완화시킨 덕분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는 올해 1~5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개월간 저소득 위기가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10만8628가구에 142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엔 14만9986가구에 238억7200만 원을 썼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여기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물품 지원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를 맞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복지제도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기준 완화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상반기(1만1264가구)보다 4708가구 늘어난 1만5972곳의 위기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1~5월에는 8434가구에 41억여 원이 지원됐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한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여름 폭염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송파·도봉구 '아동친화 상위도시' 인증

서울 송파구와 도봉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와 모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사진은 서울도봉구 어린이홍보대사와 함께한 이동진 도봉구청장.

연합뉴스

강동구, 미취업 청년에 50만 원씩 구직수당

서울 강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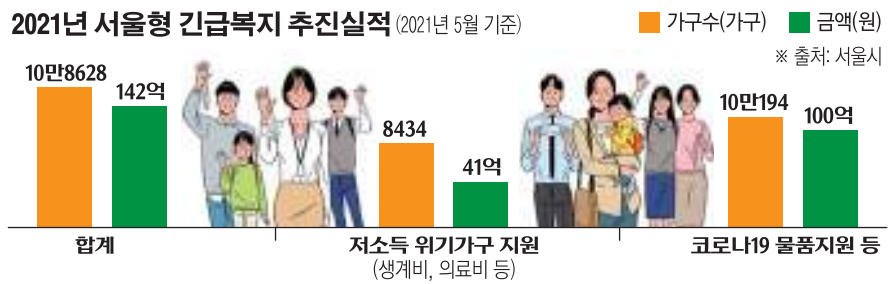
취업장려금은 강동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청년으로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26시간 이하나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대상인 자,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강동구 코로나19 실직아르바이트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3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 규모 추가 발행

12~14일 20개 자치구서 판매

'서울사랑상품권'이 12일부터 추가 판매된다. 2월 3940억 원 규모로 발행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추경에서 확정된 하반기 추가 발행물량은 총 4000억 원이다. 12일 10시부터 자치구에서 상품권을 차례대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20개 자치구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며 나머지 자치구는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하반기 1차 발행규모는 총 2000억 원이고 나머지 2000억 원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9월 추석 전 특별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20개 상품권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70만 원으로 구매한 상품

권은 5년 내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9개 상품권결제 앱과 1만 이용 회원으로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이 발행 1년 여 만에 누적 판매액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20개 상품권 결제앱에 이용회원이 326만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도 33만개에 이른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막대한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성동구 "2027년까지 7년간 생활쓰레기 절반으로 감축"

서울 성동구는 2027년까지 생활쓰레기를 50% 줄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구는 '성동구 자원순환(제로 웨이스트) 도시 조성' 비전에 따라 7개년 계획에서 생활매년 7%씩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감량의 실질적인 추진

을 위해 주민의 공감과 참여 유도,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률 높이기 등 3대 정책을 추진한다. '성동 푸르미 재활용 정거장' 운영부터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재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회수센터 자원순환 전용 교육장을 마련해 분리배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연령대별 맞춤 환경교육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쓰레기 줄이기 홍보단', '재활용 나눔 녹색장터'를 운영한다.

박은평 기자 pepe@

모두가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세계로 이어진 30년.

세상 모든 아이들 편에서 함께한
모두가 굿네이버스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군더더기 없이 쌉쌉



통신비, **리브모바일**로
세상 가벼워진다

데이터 무제한이 월 28,800원
FLEX LTE 요금제

www.liivm.com

리브모바일을 검색하세요



최대 24만원
더 가볍게!
갤럭시를
가져봐

기간: 2021.07.01(목) ~ 2021.09.30(목)

대상: Liiv M Shop이나 삼성 모바일스토어(KB국민은행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내)
갤럭시 폰 구매 후 이벤트 페이지에 주문번호 입력한 고객혜택: 미션 혜택 최대 16만 포인트리와
유지 혜택 최대 8만 포인트리, 총 24만 포인트리 제공

이벤트 바로가기

Liiv
리브모바일

*FLEX LTE 요금제 이벤트 월 기본료 28,800원은 이벤트 기간인 2021.7.1. ~ 7.31. 기간 중 개통한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개통월 포함 24개월간 제공됩니다.(이벤트 기간 종료 또는 선착순 마감 시, 월 기본료 39,800원, 월 최저 34,300원)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 또는 Liiv M 고객센터(1522-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563호(2021.06.23.), 광고물유효기간 2021.7.31.까지

KB 국민은행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아기’가 나타났다

‘생후 59일’ 아들과 출산 후 첫 등원한 용혜인 의원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본회의장 출입 ‘아이동반법’
“출산·육아·의정활동 병행할 수 있게” 국회 통과 촉구

국회에 생후 59일 된 영아가 등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아들이다. 용 의원은 출산 후 첫 국회 출근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아이동반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내의 육아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부터 국회에 출근해 의정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5월 8일 출산한 아이와 회견장에 함께 왔지만, 기자회견은 홀로 진행했다. 이후 회견이 끝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 중에는 아이를 안고 진행했다.

용 의원은 아이동반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아이동반법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얘기했다. 이어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도 출산과 육아,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 통과를 위해선 “내일부터 각 당의 원내대표를 찾아보는 일정들이 잡혀있다”며 “아이동반법의 빠른 통과를 당의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께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고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지원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었고 앞으로도 겪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해결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내 육아 시스템에 대해서도 수유실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는 “수유실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처음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김상희 국회의장의 장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부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필요한 게 굉장히 많다”며 “아이 기저귀를 갈기 위한 교환대도 필요하고 아이를 눕혀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수유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기본적인 곳이니깐 이런 거부터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용 의원은 앞으로도 여유가 될 때 아이를 동반한 출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단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도 고민하고 있다”며 “남편이 아이를 보기

도 하고 제가 아이를 보기도 하고 친정엄마 찬스를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이를 봐야 할 타이밍에는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국회를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임기 중 출산한 현역 의원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용 의원이 세 번째다. 아이동반법은 2018년 신 전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준상 기자 jooon@

62년 만의 남매 상봉



1959년 여름 인천 중구 배다리시장 인근에서 실종돼 가족과 헤어진 진명숙(66) 씨가 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62년 만에 큰오빠 정형근(76) 씨와 상봉해 포옹하고 있다. 진 씨는 2년 전 가족을 찾기 위해 유전자 등록을 했고 경찰의 분석 끝에 여동생 실종신고를 해놓은 작은오빠 정형식 씨(재캐나다)와 친남매인 것이 확인됐다. 진 씨는 이날 또 다른 오빠 정형근 씨와 상봉하고 정형식 씨와는 화상으로 만났다. 연합뉴스

7개월 만에 우승 갈증 푼 고진영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에서 우승한 고진영(오른쪽)이 3위에 오른 가비 로페스(멕시코)로부터 삼페인 세례를 받고 있다. 더 콜로니/AP연합뉴스

고진영(26)이 7개월 만에 우승 갈증을 씻어냈다.

고진영은 5일(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더폴로니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 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적어내며 최종 합계 16언더파 268타를 기록, 2위 마틸다 카스트렌(핀란드·15언더파 269타)을 1타 차로 제치고 시즌 첫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지난해 12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LPGA투어 통산 8승을 거두면서, 지난해 패아웃했던 세계 랭킹 1위 재탈환 가능성을 높였다.

김재영 기자 maccam@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 시작한 토스 이승진 대표

“소액 후원문화 확산 계기 되었으면”

“소액 후원 문화 관심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승진<사진> 토스 대표가 5일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는 토스 앱에서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선택하고 간편 송금으로 후원금을 보낼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도 앱 내에서 입력하면 된다.

송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1회 최대 120만 원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회 1곳에 보낼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최대 500만 원, 다수 후원회 기부 시 총 기부 한도는 연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법인 및 단체, 미성년자, 공무원, 외국인 등은 서비스

기부내역 소셜미디어 공유 가능

현재 21개 의원실·4개 정당…

송금 서비스 후원회 점차 확대

를 이용할 수 없다. 공익적 취지에 맞춰 송금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금융의 맥락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서비스를 고민하던 중,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쉽고 간편하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고 기부 내역을 소셜미디어에 공유도 가능해진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소액 기부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려면 주로 각 의원실이나 정당 후원회에 직접 연락하거나 홍보물 등을 통해 입금 계좌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또,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유선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현재 서비스를 신청한 후원회는 국회의원실 21곳과 중앙 정당 4곳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금 모집 주체는 각 국회의원 및 정당의 후원회다. 토스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기부금은 연말정산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5%까지 종합소득



산세액에서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6월말 현재 토스 사용자는 2000만 명이다. 세대별로는 20대의 80%, 30대의 67%, 40대의 50%가 이용 중이다.

김범근 기자 nova@

SH공사 사장 김현아 前의원 내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에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김현아 전 의원을 SH공사 사장 후보로 정하고 이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고, 오세훈 시장이 김 전 의원을 사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김 후보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을 거친 주택 분야 전문가다. 20대 국회에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사장 자리에 오르면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대책과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3년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한국증권금융, 박판규 상임이사

한국증권금융은 5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박판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상임이사(상근 감사위원)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판규 선임 상임이사는 제47회 사법시



기는 2년이다.

함께 합격해 한국은행 조사역,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화우파트너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임

이민아 기자 ljh@

인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원 선임 △경영관리본부장 김병수 △일자리본부장 우영환 ◇부서장 전보 △인재경영실장 이병철 △디지털혁신실장 전병원 △정책연구실장 정병욱 △기금관리실장 이찬호 △정보보안실장 김지홍 △기업인력지원처장 김근영 △성과보상기획처장 윤인규 △호남연수원장 정영욱 △청년창업사관학교장 김성희

◆교보증권 <신임> ◇본부장 △디지털 신사업본부 이용훈 ◇부서장 △디지털 신사업기획부 박정현

◆미래에셋증권 ◇이사대우 승진 △멀티온용1팀 박남영 △IB2팀 송혁진 △인사팀 신현섭 △부동산금융1팀 이경현 △OCIO운용팀 한요섭

◆그린기친·올가니카 △그린기친 부회장 겸 대표이사 정덕상 △올가니카 대표이사 양영란 △올가니카 부사장 하보영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경제부 차장

겸 좋은일터연구소장 백승현

◆아시아경제 △편집국 중기벤처부장 겸 문화레저부장 직대 김민진 △“사회부법조전문기자(부장) 최석진 △“국제부 선임기자(부장) 이진수

부음

▲표정자 씨 별세, 이진우·정우(한화투자증권 마에데이터 프로덕트 모듈 부장)·경희 씨 모친상, 강경천 씨 장모상 = 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 발인 7일, 02-2258-5940

▲김기환씨 별세, 김도한(대구경찰청 외사계장) 씨 장인상, 김소희(국민연금공단 차장) 씨 부친상 = 5일, 대구 모래야장례식장 203호, 발인 7일 오전, 053-804-2577

▲송인식 씨 별세, 송현섭(뉴스위치 경제산업부장)·진섭 씨 부친상, 김미영 씨 시부상 = 5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1호, 발인 7일 오전 6시, 02-2225-5521

프란치스코 교황 결장협착증 수술

프란치스코<사진> 교황이 결장 협착증 수술을 마치고 현재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B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황청은 성명을 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장의 비정상적인 협착 증세로 수술을 받았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황청은 교황이 이탈리아 제멜리 대학 병원에서 결장 협착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질병은 대장 벽에 돌출 부위가 생겨 결장이 좁아질 수 있고, 복부 팽만과 복통, 배변 문제 등을 일으킨다고 BBC는 설명했다.

교황청은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원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교황은 21세이던 때 오른쪽 폐 일부를 절제했고 2014년에는 위장 질환으로 여러 일정을 취소한 적 있다. 그 밖에 좌골 신경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대영 기자 kodae0@

추창근 칼럼



주필

정부가 연금 개혁의 시늉을 내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소득대체율 45%를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놔다. 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연금을 더 주라는 주문이었는데 그런 마법(魔法)은 없다.

‘폰지게임’은 요즘의 다단계 금융사기다.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 찰스 폰지라는 이가 나타났다. 돈을 맡기면 3개월 후 2배로 돌려 준다면 투자자들을 모았고, 순식간에 돈이 쌓였다. 그는 아무 사업도 벌이지 않았지만, 몰려드는 사람들이 맡긴 돈으로 먼저 투자자들의 몫을 지불한 뒤 나머지를 챙겼다. 사기수법은 1년도 못돼 들쭉나 그는 철장으로 갔다.

“우리 국민연금이 일종의 폰지게임으로, 다음 세대에 계속 부담을 전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미래세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연금학회와 인구학회가 연 학술대회에서 차기 연금학회 회장인 이창수 숭실대 교수의 격한 표현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은 급속히 말라가는데,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개혁이 외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다. 그는 이미 연금의 잠재부채 누적을 청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발등의 불이 된것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기금 고갈이 빨라져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연금제도가 갖는 구조적 한계가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드러난다. 젊은 인구가 많고 노령층이

적은 피라미드형 인구분포일 때에는 괜찮지만, 급격한 노령화로 이 피라미드가 깨지면서 버틸 방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기실 사회보험으로서 연금제도는 처음부터 다단계 사기와 다름없는 모순적 구조로 출발했다. 세계 최초의 공적연금인 1890년대 초 독일제국의 철혈(鐵血)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도입됐다.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로부터 거둔 돈을 적립해 65세 이후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독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40대 초반이었다고 한다. 사실상 속임수였던 셈이다.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됐다. 보험료로 월급의 3%(직장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를 내고, 60세부터 가입기간 평균임금의 70%(소득대체율)를 받는 구조였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설계였다. 1998년 1차 개편으로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수급연령도 65세로 올렸다. 다시 2007년 2차 개편이 이뤄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깎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높아져 지금까지 고정된 상태다.

하지만 연금 부도(不渡)의 시계바늘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내놓은 장기전망에서 2041년 기금이 적자

로 돌아서고 2056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을 하락 추세를 감안한 계산인데 이것도 낙관적이다. 추계는 2015년 합계출산율 1.24명을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작년 출산율은 0.84명이다.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계속 늘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고, 연금 받는 노인은 급증한다. 곧 연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정부가 연금 개혁의 시늉을 내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소득대체율 45%를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놔다. 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연금을 더 주라는 주문이었는데 그런 마법(魔法)은 없다.

그러자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기초연금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12~13%) 연금도 조금 더 받는(소득대체율 45~50%) 내용의 4가지 개편안을 마련해 사회적대화가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겼다. 경사노위는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을 10년간 12%로 올리는 등의 3개 방안을 2019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국가적 과제의 해법을 결단해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정부가 책임과 리더십을 방기(放棄)하고, 오히려 사지선다형 문제로 더 복잡하게 만들어 폭탄을 돌렸다. 국회로 미룬 건 아예 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였다. 국회는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돈을 더 걷거나 주는 돈을 줄이는 걸 좋아할 국민은 없다. 표 떨어지는 일에 앞장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국회가 아니다. 결국 개혁은 물 건너 갔다.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을 어떻게든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전제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이다. 국민들도 억울하지만 다음 세대의 짐을 덜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있다. 정부만 그 불편한 진실에 눈감고 감춘다. 연금학회는 이대로 갈 경우, 기금이 거덜난 이후 국민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의 3배 이상인 30%대로 높여야 한다고 계산한다. 나라와 경제가 온전히 굴러갈 수 없다. 불과 20년 뒤의 재앙이다. 당장 지금의 청년들에게 엄청난 빚폭탄을 떠넘기면서 정부도 국회도 나몰라라 한다. 다급하고 불가피한 개혁을 질질 끌며 미래 세대의 고통만 더 키우는 무책임의 극치다. kunny56@

정책발언대



황 호 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그간 정부와 공사, 업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해운산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해운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국민들이 알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 보면 지난 3월 수에즈운하를 통한 중이던 에버기븐호가 운하 남단에서 좌초되면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상승 및 원유 수송 지연에 따른 유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 세계물류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또 HMM이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탄아라운드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음과 동시에 관련 뉴스가 쏟아졌고 선박 부족 상황에도 임시선박을 투입,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며 국적 원양선사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께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해양진흥公 출범 3년 성과와 친환경선박

지난 3년간 해운 재건의 가시적 성과를 꼽자면 국적 원양선사의 부활과 해운업에 대한 금융권의 시각변화다.

우선 HMM이 초대형선 20척 인도를 통해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체질 개선이 되면서 지난해 10년 만에만성적자를 벗어나 990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나타냈고 올해 1분기 역시 해상운임의 상승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1분기 최대 실적을 이어 가면서 완전히 부활했다는 것이다. 또 벌크선사의 2021년 예상실적 또한 기대해 볼 만한 수준으로 BDI지수 상승과 철광석 등 원자재 수요 역시 강세를 보여 팬오션, 대한해운 등 대표 부정기선사들 또한 순항하고 있다.

둘째로 해운업에 대한 금융권의 시각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과거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금융권의 해운업 취급 기피 현상으로 몇몇 우량 선사를 제외하고 은행권의 신규 선박금융 취급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으나

공사 보증서를 통한 대출상환 안정성 향상, 국책은행의 취급 유도 등 활성화 노력 끝에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된 선박을 중심으로 하나·부산·국민은행 등 국내은행 및 외국계 은행들의 해운금융 취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처럼 국적선사의 부활과 해운금융시장이 개선 조짐을 보여 다행스럽지만, 친환경 선박 확보 역시 계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공사는 2019년부터 운항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국책은행과 함께 민간은행 참여를 유도하여 지난 3년간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비롯해 중견선사 신조선 34척을 포함, 총 54척 약 2조2000억 원의 금융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폐선보조금 정책과 연계하여 21척의 노후선 교체 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공사의 이러한 지원과 노후선 교체 사업은 시장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국적 선사가 친환경 선박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시장이 함께 참여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선박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 공사는 신조선 확보를 위한 다양한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간금융 유치를 위한 신규 상품 제공을 통해 금융시장 니즈를 만족시키겠다. 해운사도 지속적인 영업이익 창출, 안정적인 재무관리, 투명성 있는 정보 공개를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친환경 시대는 우리가 ‘해운산업리더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친환경 선박 발주는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 시점이 긴 불황을 뚫고, 해운업이 모처럼 금융시장과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지점이 어떨까 싶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엔니오 모리코네 명언

“세상의 모든 종류의 소리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유용하다. 음악은 현실의 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작곡가·트럼펫 주자다. 60여 년간 450여 개 영화음악을 작업해 큰 족적을 남겼다. 대표곡은 ‘황야의 무법자’ ‘미션’ ‘시네마천국’ 등. 그는 실제 소리와 음악적인 소리, 각종 악기 등을 혼합하는 실험을 통해 영화의 내러티브와 등장인물의 심리를 표현했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떴다. 1928~2020.

☆ 고사성어 / 호우고슬(好竿鼓瑟)

피리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거문고를 연주한다는 말. 남의 비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뜻이다. 난해한 문장을 쓰는 당(唐)나라 학자 진상(陳奩)이 문장이 한유(韓愈)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그 답신인 ‘답진상서(答陳尚書)’에 나온다. 한유는 피리 좋아하는 제(齊)나라 임금에게 거문고로 벼슬을 구하려는 사람을 비유하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문장으로 바꾸길 권유했다. “왕이 우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술을 연주했으니[好竿鼓瑟] 술의 연주가 비록 공교해도 왕이 좋아하지 않은들 어찌하겠소.”

☆ 시사상식 / 긴축 발작(taper tantrum)

선진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신흥국의 통화 가치와 증시 급락을 불러오는 현상을 말한다.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게 돼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 증시 등이 급락한다. 긴축 경련이라고도 한다.

☆ 유머 / 고마운 날치기

밤길 가던 남자가 화장실을 찾지 못해 은행 365코너에서 급한 불임을 봤다. 남자는 배설물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 싸서 들고 나왔다. 버릴 곳을 찾느라 두리번거릴 때 오토바이 한 대가 날라와 그 뭉치를 낚아채 달아났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 우 란
자본시장부/hura@

K빅테크의 부상

릴 새로운 기업이 나올지 상상조차 어렵다.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상 한 기업이 이미 구축한 생태계를 파고들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는 속도는 가공할 만하다. 이들이 빅테크 기업이라 불리는 이유다. G2로 성장한 중

국도 시총 상위 1~2위가 모두 IT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전 세계 지배력을 키운 덕이고, 중국에선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상대로 독점 플랫폼으로 성장한 게 주효했다.

‘차이나 플레이’(중국 관련주),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의 빈자리를 채운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규제 헛발질

105주 내리 상승세다. 2019년 7월 이후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연거푸 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선 상승 기세가 더 가팔라졌다. 그나마 물건이 있으면 다행이다. 시중에 “아예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돈 지 오래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얘기다.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면서 신고가 거래도 속출한다. 전세보증금이 3.3㎡(1평)당 1억 원을 넘어선 아파트도 등장했다. 그야말로 재앙 수준의 폭등이다. 전세난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시장이 안정되지만 바라는 눈치다. 오죽하면 김부겸 총리가 “방법이 있다면 어디서 정책을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겠는가.

전셋값 폭등은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전세 공급 부족은 시장을 거스른 정책의 결과다. 세금 폭탄과 규제에 의존한 반시장 논리의 정책 폭주가 전세 유통을 틀어막으면서 매물 기근을 낳은 것이다. 실거주를 압박한 대출 및 재건축 규제가 대표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을 토해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겹투자(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막겠다고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게 실거주를 강제한 조치인데, 이는 결국 실거주를 내세운 집주인의 세입자 내보내기를 부추겼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난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

데스크칼럼

조철현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으로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크게 줄고 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은 남아 있던 전세 물건도 월세로 돌려줬다. 가뜰이나 저금리 시대에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크게 오르자 늘어난 세금 부담을 충당하려고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진 것이다. 세입자 역시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전셋값마저 치솟자 집주인의 월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집 가진 사람을 겨냥한 세금 폭탄의 파편이 집 없는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튀고 있는 셈이다.

분양가 규제는 전세 수요를 크게 늘려놨다.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가 된 청약 당첨을 기다리며 전세로 눌러앉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이 주 수요까지 겹치며 전세는 그야말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입주 물량도 크게 줄어든다. 올 하반기 서울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1만3023가구(부동산114 집계)로 지난 2년 같은 기간 물량보다 1만 가구 적다. 입주 단지가 나온다고 해도 전세 물량이 대거 풀리는 효과를 더는 기대하기 어

렵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선 집주인이 입주 때부터 최대 5년 동안 반드시 살아야 해서다.

이래저래 세입자들만 죽을 맛이다. 이런데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마이웨이다. 각종 규제와 세금 강화로 국민을 편 가르느 ‘부동산 정치’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은 집값 상승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집값 급등은 무주택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지만 전셋값 폭등은 아예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다. 서민 주거 안정이 민생 중의 민생인 이유다.

해법은 간단하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전세 공급을 늘리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전세 물건 유통을 막고 있는 반시장적 규제 사슬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전셋값도 잡고 서민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신규 주택 공급 방안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정부는 2·4 대청 등 뒤늦게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놔지만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사업 진척이 더디기만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뢰성 추락과 개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주택 공급의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 집 지을 땅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서울에선 민간 영역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사업절차 간소화는 빠르면서도 대규모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choch21@

노트북을 열며

조남호

IT중소기업부 차장



지난달 28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났다. 5G(5세대) 이동통신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작년 말 이후 이동통신업계에서는 28㎓ 대역 ‘진짜 5G’ 논란에 시달리길래다. 특히 통신 3사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올해 안에 28㎓ 대역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3월 말까지 구축한 기지국 수가 91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통신 3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각각 2000억 원에 할당받았지만, 사업성을 이유로 이미 손상 처리했다.

임 장관은 간담회에서 “28㎓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인프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활성화해야 한다”며 “국가 자원 주파수를 할당받은 만큼 책임감 있게 망 구축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의 논란을 의식하더라도 한 듯 이전보다는 강경한 눈조였다.

20배 빠른 5G, 꿈은 꿈으로?

임 장관은 장관 취임 전 인사정문회에서 “서비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고 기술 성숙도도 높지 않다.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28㎓ 5G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지지부진한 28㎓ 기지국 설치에 대한 여론 악화 등이 부담이었는지, 아니면 임 장관의 논조 변화를 의식한 건지는 몰라도 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

3사 CEO들은 코엑스, 수원 위즈파크, 부여 정림사지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핫스팟성’ 지역 10여 곳에 직접 예산을 들여 28㎓ 5G망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 2호선 신설동과 성수역 구간에서 28㎓ 5G망으로 백홀로 구성해 지하철와 이파이 품질을 끌어올리는 실증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통신 3사 CEO의 입장 변화가 28㎓ 전국망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처럼 낮아 보인다. 이들이 투자 대비 수익성이라는 기존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실증 사업의 실효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통신 3사 CEO들은 지하철 실증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품질 확인이 우선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실증 결과

를 토대로 추가 확산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8㎓ 대역 주파수는 잘 휘어지지 않는 전파 특성상 도달 범위가 좁아 지하철 차량의 앞뒤와 객실 내부에 장비를 추가로 깔아야 해 설치비가 더 든다.

더군다나 이들은 전국망의 핵심인 28㎓ 기지국 구축에 대해서는 일단반구조차 없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들이 28㎓ 구축 실적을 제출하면 내년 초 이행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즉 28㎓ 5G의 B2C(기업 소비자 간) 서비스는 어렵다는 것을 홍보와 소통을 강화해서 제대로 알리자는 퇴로 마련에 입을 모았다. 세계 최초 상용화 당시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보도자료를 뿌려대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는 품질과 고가 요금제 논란이 계속되는 5G에서 요금제 변경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도 LTE로 유턴하고 있다. 이들보다 강경한 소비자는 집단소송을 주저하지 않는다.

소비자 후생은 등한시한 채 ‘최초’라는 타이틀과 돈 벌기에만 급급했던 정부와 업계의 이해가 맞물려 빚어진 촌극에 ‘진짜 5G’는 아득하기만 하다.

spdran@

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

중소기업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또다시 절박하게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수 영세기업이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견디는 상황이고,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과 노조법, 또 공휴일법 등의 시행이 겹쳐 숨통이 막힌 실정을 토로했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더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경영의 수용 한계를 벗어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근로자 1인당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월 227만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법적 의무비용을 더한 수치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현실에서 실제 지출은 1만464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결국 과도한 최저임금 부담이 기업들의 지불능력 부족을 불러 그 수준의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만 늘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작년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이 비율은 16.5%였다.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보다도 훨씬 높다는 분석이 이런 불균형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전보다 나빠졌고, 40.2%는 정상적 임금지급마저 어렵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신규채용 축소(28.2%)와 기존 인력 감원(12.8%)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을 올릴 수록 일자리만 더 없어진다는 실증적 분석은 수없이 나와 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2018~2019년의 고용 인상으로 현장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친 탓이다.

현재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080원(23.9%)을 올린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안(87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시한은 이미 끝났지만, 8월 5일의 고시 시한을 앞둔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말이 지어져야 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큰데 시간은 별로 없다. 결국 의사결정의 키를 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들이다. 이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책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특허, 특!

특허취득 공시와 주가 변동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특성이 있으므로 개별 기업의 주가는 기업 관련한 호재성 뉴스 등에 의하여 단기 급등 또는 급락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허취득 공시도 단기 호재성 뉴스로 취급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하지만, 특허취득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 특허취득 공시와 주가 변동의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특허취득 공시를 보고 주가 상승을 예측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허취득 공시는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 공시에 해당하므로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공시할지 여부는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제 일년에 수백 또는 수천 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대기업의 경우 특허취득 공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일년에 몇 건 또는 수십 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등록 건마다 특허취득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으로는 특허취득 공시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

허권의 가치는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 제품 적용 또는 적용 가능성 여부, 무효 가능성, 시장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므로 개별 특허의 취득 그 자체가 기업 가치의 큰 상승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특허를 취득한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라면 해당 기업의 개별 특허취득 공시보다는 전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상용화된 제품 또는 미래 상용화할 제품에 적용 또는 적용될 특허가 있는지 여부, 특허가 있다면 복수 개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넓은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항목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향후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 리포트에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관련한 내용이 더 상세하게 포함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SAMSUNG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류케어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 맞춰서
마침내 의류케어의 완성

BESPOKE 슈드레서 | BESPOKE 에어드레서 | BESPOKE 그랑데^{AI}

가전을 나답게.